

國務調整室
政策調整事例 第2輯

政策調整事例 綜合

- 99. 9月부터 2000. 5월까지 -

2000. 6



國務調整室

政 策 調 整 事 例 綜 合

- 99. 9월부터 2000. 5월까지 -

2000. 6

國 務 調 整 室

目 次

I. 國務調整室의 政策調整

1. 國務調整室의 機能	9
2. 政府政策調整의 重要性	10
3. 國務調整室의 政策調整 類型	11
4. 政策調整事例輯 發刊	17

II. 政策調整事例 綜合

□ 總括調整官室

< 企 劃 >

○ 시내버스 廣告사업 관련 조정	23
○ 원격영상회의시스템 구축 추진	25

< 外交安保 >

○ 제3차 아시아·유럽정상회의 준비 지원	27
○ 조선족 문제관련 정부종합대책 수립	29
○ 충무계획 循期 조정	31
○ 노근리사건 대책 추진	32

< 自治行政 >

○ 군필가점 위험결정에 따른 대책 추진	33
○ 「인터넷 신문고」 관리·운영방안 수립	34
○ 태백시 지역현안관련 대책 수립	35
○ 공동구 관리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정	37

○ 지하위험매설물 관련 관계기관 이견 조정	38
○ 동해안 산불피해 지원규모 관계기관 이견 조정	39
○ 건설안전관리분야 제도개선 추진	40
○ 재난·재해의 조직·법률 일원화 방안 강구	41
○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대책 추진	42
○ 도로교통안전분야 제도개선 추진	43

< 次官會議・國務會議 案件 調整 >

○ 주택건설기준 관련 조정	44
○ 전자상거래기사 자격 신설여부 관련 조정	46
○ 林道건설시 관계부처 협의 및 의견청취관련 조정	47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재원 관련 조정	48
○ 저작권법 개정관련 조정	49
○ 지방소방조종사에 대한 항공수당 신설여부 조정	51
○ 개방형직위 충원시기 조정	53
○ 골프장 부지면적제한 폐지여부 조정	55

□ 經濟調整官室

< 財經金融 >

○ WTO 뉴라운드출범 대응방안 강구	59
○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관련 조정	60
○ 대외금융정보시스템(FIU) 구축 관련 조정	61
○ 고액특별복권 발행 관련 조정	63

< 産 業 >

○ 7~10인승 승합차의 LPG 사용문제 조정	65
○ 청주 지역난방 사용연료 조정	67
○ 백화점 등 무료셔틀버스 운행 개선	69
○ 변리사 법인제도 도입에 따른 「특허법률법인」 명칭사용 조정	71

○ 석회석광산 등에 의한 자연훼손 방지대책 마련	73
○ 몽골 등 국가별 산업연수생 배정인원 조정	75
○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관련 조정	77
○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체계 구축	78
○ 마포 석유비축기지 이전 조정	79
○ 벤처 추진시책의 효율화 추진	80
○ Y2K문제 대책 추진	81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점검단 운영	83
○ 국가정보화사업 총괄·조정	84
○ 사이버테러 방지업무 추진체계 정립	85
○ 재정정보화분과위원회 주관부처 지정	86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효율 조정	87

< 農水産建設 >

○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 도입 관련 조정	88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관련 조정	90
○ 국가지리정보체계(NGIS)법 제정 관련 조정	92
○ 고속도로 통행료분쟁 조정	94
○ 과밀부담금 지자체 귀속분 상향조정	96
○ 중부권 내륙화물기지 입지선정	97
○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 조정	98
○ 화물트럭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 할인 추진	100
○ 산업선 송전선로 승압개량관련 비용부담 조정	101
○ 입찰제도 등 건설산업 구조개편 관련 조정	103
○ 건설업 양도양수에 따른 신인도 승계 여부 조정	105
○ 논농업직접지불제 도입 추진관련 조정	107
○ 채광계획인가시 인가대상면적 관련 조정	108
○ 채석제한거리에 대한 조정	109
○ 한·일 어업협정 후속조치관련 조정	110
○ 해양개발기본계획 내용의 부처간 이견 조정	112

□ 社會文化調整官室

< 福 祉 >

○ 4대 사회보험 관리운영 통합방안 수립	115
○ 공·사연금제도 개선 추진	116
○ 사회복지정책 관계장관회의 구성	117
○ 장애인고용관련법 단일안 관련 조정	118
○ 서울 지하철의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추진	120
○ 동절기 노숙자지원대책 관련 조정	121
○ 식품안전관리대책 추진	122
○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 추진	123

< 敎育文化 >

○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추진 조정	125
○ 인적자원개발 추진체계 구축	127
○ 골프장 시설개선 관련 조정	129
○ PC방의 건전화 및 환경개선 대책	130
○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추진	131

< 失業對策 >

○ 실업·복지 전산망 연계센터 운영주체 조정	132
○ 일용근로자 보호대책 추진	133
○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의 고용보험 적용문제 조정	134
○ 공공근로사업 민간위탁 활성화 추진	135
○ 정부지원 인턴제 사업관련 조정	136
○ 해외취업 추진사업 조정	137
○ 공공근로 DB구축사업 추진방향 조정	138
○ 국민연금 길라잡이사업 추진방향 조정	139
○ 중식지원사업 추진방향 조정	140

□ 規制改革調整官室

- 청소년보호연령 적용기준 조정 143
- 인삼제품의 관리체계 조정 145
- 양식어업 생산성향상대책 관련 조정 146
- 소형어선의 출입항 신고제도 개선 147

□ 水質改善企劃團

- 새만금 간척사업 환경영향공동조사단 구성·운영 151
- 통합정수장 비용부담방안 조정 153
- 하수도사업비 재원조달 및 지원체계 조정 155
- 물관리정보화 추진방향 조정 158
-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 조정 160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 관련 조정 164
- 경부고속철도 환경영향평가 소음기준 조정 167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 추진 169
- 영월댐 건설 타당성 종합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 구성·운영 171

I . 國務調整室의 政策調整

1. 國務調整室의 機能

- 국무조정실은 73년 2월1일 차관급 기관인 「行政調整室」로 설립되었으며, 98년 2월28일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단행된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長官級 機關인 「國務調整室」로 개편
- 국무조정실은 각 중앙행정기관의 行政의 指揮・監督, 政策의 調整, 審査評價 및 規制에 관하여 國務總理를 補佐하는 임무를 수행(정부조직법 제20조)
- 국무조정실은 각부처 업무에 대한 政策調整機能과 審査評價 機能이 강화되었으며, 規制改革機能이 신설됨.

국무조정실의 정책조정기능, 심사평가기능, 규제개혁기능 중 政策調整機能에 焦點을 맞추어 政策調整事例緝 第2輯을 발간

2. 政府政策 調整의 重要性

- 政府의 主要政策은 관계부처 협의, 민간의견 수렴 등 多様な 節次를 거쳐 決定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한 部處가 獨自적으로 政策을 추진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
 - 정책추진과정에서 부처들은 각자 多様な 公益을 代辯하기 때문에 政策 決定過程은 곧 協議過程이며, 이것이 民主主義式 意思決定過程의 核心임.
 - 이러한 과정에서 部處間 意見對立은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으며, 특히 行政의 專門性이 깊어지면서 이러한 現象은 앞으로도 크게 增加할 것으로 보임.
- ⇒ ① 政府政策을 부처 차원이 아닌 國家次元에서 多様な 公益을 均衡있게 추구할 수 있도록 잡아주고
- ② 부처간 이견대립이 장기화되어 政策이 失機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政策의 調整機能은 무엇보다 중요

3. 國務調整室의 政策調整 類型

국무조정실의 政策調整은 다양한 方法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概略적으로 分類하면 다음과 같음.

(1) 「各種 委員會」를 통한 調整

- ☐ 各種 委員會는 國政의 많은 분야중 力點적으로 推進해야 하는 과제로서, 關係部處가 많고 中・長期的으로 狀況을 管理하기 위해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目的이 達成되면 廢止됨.
 - 國務總理가 委員長인 委員會 : 총32개
 - 國務調整室長이 委員長인 委員會 : 총13개
- ☐ 各種 委員會를 통한 調整은
 - 위원회를 직접 개최하여 政府政策을 審議・確定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처간 이견, 부처의 애로사항을 實務적으로 調整하는 기능도 매우 重要的 部分을 차지하고 있음.

□ 「各種 委員會」를 통한 調整事例(例示)

- 분야별 정보화 시행계획, 전자정부 종합 실천계획, 정보화 관련 법·제도 정비계획 등 심의·확정

⇒ 情報化推進委員會(국무총리 주재) : 99.9, 2000.3

- WTO 제3차 각료회의의 뉴라운드 출범 관련 협상을 위한 우리측 입장 정리

⇒ 對外經濟調整委員會(국무총리 주재) : 99.11

- 4대 사회보험의 통합범위와 단계별 통합 추진방안 마련

⇒ 社會保障審議委員會(국무총리 주재) : 99.11

- ASEM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건설현황, 회담의제, 홍보 등 전반적인 상황 점검

⇒ ASEM準備委員會(국무총리 주재) : 2000.4

- 동해안 산불피해 관련 상황관리 및 국고지원 규모 결정

⇒ 中央安全對策委員會(국무총리 주재) : 2000.5

- 영월댐 건설의 타당성 종합 검토

⇒ 水管理政策調整委員會(국무총리 주재) : 99.6~2000.6 현재

-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여부

⇒ 失業對策實務委員會(국무조정실장 주재) : 99.12

(2) 「次官會議」를 통한 調整

- 통상적으로 매주 1회씩 개최되는 次官會議는 國務會議의 前審機構로서 부처간 쟁점사항에 대해 事前 協議・調整하는 기능을 수행
- 國務調整室長이 次官會議 議長이므로, 차관회의시 條件附議決된 事項은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회의를 개최하여 충분한 검토를 거쳐 異見을 調整한 후 國務會議에 上程
- 「次官會議」를 통한 調整事例(例示)
 - 일정세대이상 주택건설시, 유치원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의 「住宅建設基準 등에 관한 規程 改正案」(99.9)
 - 전자상거래 관리사와 별도로 전자상거래기사 자격을 신설하는 내용의 「國家技術資格法 施行令 改正案」(99.9)
 - 장기 未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재원마련을 위한 「都市計劃法 改正案」(99.1)
 -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을 「著作權法」에 명시하는 문제(99.11)
 - 상위직급 결원발생시 개방형 직위 등 우선적으로 충원하는 문제에 관한 「開放型 職位의 運營 등에 관한 規程案」(2000.2)

(3) 國務調整室의 「主導的인 調整」

□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가 大統領의 命을 받아 行政各部를 統轄하는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國政全般의 主要懸案을 수시로 把握 報告하고, 필요한 사항을 建議하고 있음.

□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部處에서 調整을 要請하기 前에 國務調整室이 主導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① 國務總理 指示事項

② 여러부처가 관련되어 한 부처의 主導的 推進이 어려운 課題

③ 問題點이 발견되었거나 시급히 推進해야 할 사항으로 파악된 課題

④ 言論 등 대외적으로 社會問題化된 과제

□ 「主導的인 調整」事例(例示)

○ 사회전반의 Y2K 問題解決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 범정부적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추진상황을 점검·관리(98.3~2000.3)

○ 93.12월 우리나라가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이후, 부처별로 추진해 온 氣候變化協約業務를 범정부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추진상황을 점검 관리(98.6~2000.6 현재)

- 컴퓨터 바이러스, 해킹이 사회문제화 될 우려가 커지자 이를 범국가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사이버테러防止 關係長官會議」를 신설하고, 업무추진체계를 조정(2000.3)
- 朝鮮族과 관련된 강력범죄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綜合對策을 마련하여 제도개선(2000.3~4)
- 인천노래방 화재사고(99.10.30)를 계기로 안전문제가 국가적 관심사로 대두되어 「國家安全管理 綜合對策」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립(99.12~2000.6 현재)
- 석회석 광산, 화강암 채석장 등의 개발에 따른 自然毀損 및 環境汚染을 最小化하기 위해 법적·제도적 개선 대책 마련(2000.4~2000.6 현재)
- 95.11~99.2간 한시적으로 유보했던 판교톨게이트 通行料 徵收를 99.2에 재개함에 따라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이를 조정(99.10)
- 老人·障礙人의 地下鐵 利用 便宜施設의 실태를 조사하고 연차별로 편의시설 확대방안 수립(2000.4)
- 야생동물의 密獵·密去來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 수립(2000.2)

(4) 「各部處의 要求」에 의한 調整

- 각부처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장기화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國務調整室에 調整을 要請
- 各部處로부터 調整 要請이 있으면
 - 먼저 요청과제의 실무검토를 거친후, 사안의 중요성에 따라 審議官 또는 調整官 主宰로 關係部處 會議를 개최하여 조정을 수행
 - 조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國務調整室長 또는 國務總理 主宰 關係部處 會議를 개최하여 조정을 마무리
- 「各部處 要求」에 의한 調整事例(例示)
 - 7-10인승 乘合車의 LPG 使用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해 2000.1부터 금지됨에 따라 이의 타당성 여부 검토(99.10)
 - 운수업계, 중소유통업계가 백화점의 無料셔틀버스 運行停止를 요청한 집단민원 관련(99.11)
 - 2002년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현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인근의 石油備蓄基地 移轉을 서울시가 건의(2000.6)
 - 仁川國際空港에 자기부상열차를 도입하는 문제의 타당성 검토와 면세점 운영자 선정방식 관련(99.9~10)

- 國家地理情報體系(NGIS)구축과 관련된 위원회 구성, 운영, 표준화 등을 규정할 법률제정 관련(99.9~10)
- 서울시 구청장 협의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서울시의 대형건축물에 부과하는 過密負擔金 收入의 配分比率 調整을 건의한 것 관련(99.11)
- 학기중은 물론 방학기간까지 연270일의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學校給食法을 改正한 후 이에 소요되는 豫算을 教育監과 市・道知事が 어떤 비율로 부담하는지에 관한 사항(2000.1)
- 태백지역에서 炭鑛 廢鑛에 따른 對策要求를 위해 집단행동을 강행함에 따라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99.12)

4. 政策調整事例 第2輯 發刊

- 이번에 발간한 政策調整事例는 지난 第1輯(98.3~99.8)에 이어 99.9월부터 2000.5월까지 國務調整室에서 추진한 政策調整事例中
 - 비교적 國民生活과 밀접히 관련이 있고 事後管理가 필요한 사항을 중심으로 종합한 것이며
 - 별도로 審査評價報告會를 개최하는 「審査評價」分野는 制外하였음.
- 앞으로도 매년 이러한 「政策調整事例輯」을 발간하여
 - 관련부처간 業務協調와 조정결과의 事後管理 資料로 활용함은 물론
 - 국무조정실의 機能分析 資料 등에도 활용해 나갈 계획임.

II. 政策調整事例 綜合

☐ 總括調整官室 ☐

☐ 經濟調整官室 ☐

☐ 社會文化調整官室 ☐

☐ 規制改革調整官室 ☐

☐ 水質改善企劃團 ☐

□ 總括調整官室 □

市内버스 廣告事業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시내버스 廣告사업 廣告물량이 99년도에 23,000대에서 13,000대로 감소됨에 따라 전국자동차노련 지원금이 감소되고 99.7월 행자부가 시내버스 廣告를 25,000대까지 확대하였으나
시내버스 廣告사업 주요 당사자인 아시아조직위 · 廣告대행사 (대한매일) · 자동차노련의 입장차이로 협상타결이 지연

□ 爭點事項

- 추가계약 문제
 - 아시아조직위 : 아시아대회 기금마련과 자동차노련 지원을 위해서는 7,000대(총2만대) 이상을 추가계약 해야하나, 廣告시장 여건이 어려우면 최소 5,000대는 추가계약해야 함.
 - 대한매일 : IMF 여파가 가시지 않아 廣告시장 전망이 불투명하므로 5,000대를 추가계약하되, 계약기간은 2002.12까지 연장하고 廣告단가를 인하 조정

○ 자동차노련 지원금 보전문제

- 아시아조직위 : 99.11월분부터는 광고대행사인 대한매일과 광고물량 확대 추가계약을 추진하여 지원하되, 99.1~10월분은 조직위, 대한매일, 자동차노련이 3분하여 부담
- 대한매일 : 99.1~10월분에 대해 광고대행사 배당금에서 소급하여 추가지원하는 것은 곤란
- 자동차노련 : 대한매일이 당초 계약물량 이상의 광고를 부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으므로 대한매일이 부족분의 일부를 부담

□ 調整經過

- 99.10.23 총괄조정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
- 99.11. 4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기관 회의

□ 調整結果

- 추가계약문제
 - 광고물량은 5천대를 추가계약하고 광고단가는 현수준을 유지
 - 다만, 조직위와 대한매일은 2000년말에 2001년 이후의 광고시장 여건 등에 대한 실사를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광고물량과 광고단가에 대해 쌍방이 합의하여 계약을 수정
- 자동차노련 지원금 보전문제
 - 99.11~2000.12월까지 발생하는 추가수익금중 아시아조직위, 대한매일, 지방교통사업특별회계가 각각 45%를 자동차노련에 지원

遠隔映像會議시스템 構築 推進

□ 推進背景

- 정보화 사회를 맞아 대면회의로 인한 시간낭비를 줄이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에 원격영상회의실을 설치·연결

□ 推進經過

- 2000. 1.19 기획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실무자회의
- 2000. 1.27 총괄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 2000. 2.12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

□ 推進過程

- 민·관 합동으로 「준비기획단」을 구성·운영(2.12)
(단장 : 국무조정실장 → 행자부 장관(3.7))
 - 행·재정 지원팀과 시스템 구성·설계팀으로 구성
 - 삼성전자, POSCO 등의 영상회의실 견학
 - 소요자원 조달문제를 정통부, 행자부, 예산처와 협의·확정
- 사업자 입찰공고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3.24)
- 대학교수들로 기술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3.30)

- 사업자로 「삼성SDS 컨소시엄」을 확정(4.4)
- 계약서 체결(4.10)
 - 총사업비 : 7,746백만원
 - 사업기간 : 4.10~6.30(운영테스트 포함)
- 시스템 개통 : 7.1

□ 推進內容

- 중앙청사와 과천청사에 20명 정도가 앉을 수 있는 영상회의실 설치
 - 120인치 대형 스크린 2개를 설치하고 고품질의 영상·음향서비스 도입
 - 국무회의, 차관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인테리어 설치
 - 회의자료 및 토론내용의 同時同報시스템 구축
- 회의운영의 편의성 및 보안성 고려
 - 별도 조작없이 기존회의처럼 운영
 - 초고속 E1(2Mbps)망 연결로 실시간 토론 가능
 - 별도의 전용회선 설치로 보안성을 강화하고, 백업회선 설치로 안전성 확보
- 청와대(TV형 시스템) 및 대전청사(영상회의실 기구축)과도 이번에 연결함으로써 활용 극대화 도모

□ 向後 推進計劃

- 6월중 「원격영상회의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실무자급 회의도 영상회의실을 사용토록 권고하는 등 이용활성화 방안 강구

第3次 아시아·유럽頂上會議 準備 支援

□ 推進背景

- 제3차 ASEM 정상회의는 2000.10.20(금)~21(토), 강남 무역회관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예정
 - 아시아 10개국, 구주 15개국 정상 및 구주연합 집행위원장등 26명의 정상과 3000여명의 대표단 참석
- * 제1차 ASEM회의 96.3 방콕, 제2차 ASEM회의 98.4 런던 개최

□ 論議事項

- ASEM 정상회의 표어 결정
- 차량협찬사에 외국자동차회사 포함여부
- 홍보업무에 있어서의 역할분담
- 체계적인 홍보수행을 위해 준비위원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ASEM준비위원회규정 개정 여부등

□ 推進經過

- 1999.12.23, 제5차 ASEM준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 2000. 4. 7, 제6차 ASEM준비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 會議結果 및 其他 措置事項

- ASEM 정상회의 표어 확정
 - 「새천년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관계(ASEM III: Partnership for prosperity and stability in the New Millennium)

- 국산 및 외국차량 공동으로 차량협찬 결정
 - 현대, BMW, BENZ, VOLVO 등
- 홍보체제 확정
 - 국정홍보처는 국내외 사전홍보 및 대언론 업무지원
 - 외교통상부는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브리핑 전달
 - 준비기획단은 미디어센터 조성 및 운영업무 주력
- 준비위원회 규정개정 보류
 - 현행 준비위원회 체제를 유지하되, 위원이 아니더라도 관련 인사들을 널리 참여시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운영하여 회의 효율성을 제고
- 기타사항
 - ASEM 회의장 건설현장 점검실시
 - 총리님 현장순시(2000.3.30)
 - 총리님 지시로 외부 전문가에 의한 회의장 내부시설 점검실시(2000.4.18~4.19)

朝鮮族 問題關聯 政府綜合對策 樹立

□ 推進背景

- 우리나라 및 중국내에서 조선족과 관련된 강력범죄등 각종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대책 수립 추진

□ 爭點事項

- 조선족 한국입국문호 확대방안
- 국내 불법체류 조선족에 대한 대우개선 방안
- 조선족관련 강력범죄 대처방안
- 중국 여행객에 대한 홍보방안
- 중·장기적인 조선족사회 지원방안 등

□ 推進經過

- 2000. 3.23 총괄조정관 주재 외교통상부등 10개부처 국장급회의 개최
- 2000. 4.18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2000. 4.21 정부종합대책 확정 및 발표

□ 主要内容

- 단기대책
 - 단기사증 발급기간 확대 : 15일이내→90일까지
 - 상용복수사증 발급기준 완화 : 중국과 관련협정개정 추진

- 조선족에 대한 무료 법률구조 제공
- 한·중 범죄인 인도조약 체결 추진
- 외교부·법무부·관계공관간 전산망 연결, 출입국관련 정보 공유
- 주중국 공관에 외사협력관 2명 증원(북경, 선양) 등

○ 중장기 대책

- 언론을 통한 국민의식개선 캠페인 전개
- 조선족 고용업주에 대한 계도교육 강화
- 민간단체·기관간 교류확대
- 현지기업의 조선족 고용확대 유도 등

○ 기타 조치사항

- 상기 정부종합대책을 각 부처에 시달(4.21)
- 향후 조선족관련 문제동향추이를 면밀히 파악해 가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정부대책 검토(입국문호추가개방, 직업훈련원 설치등 포함)

忠武計劃 循期 調整

□ 推進背景

- 충무계획의 부처별 집행계획은 전년도 8월말까지 수립토록 되어 있어
 - 매년 8월 중순경 실시되는 을지연습 결과 도출되는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다음년도 계획에 곧바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 발생

□ 爭點事項

- 을지연습 결과 도출되는 문제점을 다음년도 부처별 집행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①을지연습 시기를 전반기로 앞당기는 방안과 ②부처별 집행계획 작성시기를 을지연습 이후로 연기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

□ 調整經過

- 비상기획위원회로 하여금 충무계획 순기를 조정했을 때의 장점과 아울러 정부예산편성 시기, 한미간 군사훈련 협조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케 하여
 - 부처별 충무계획 작성시한을 을지연습 후로 연기하는 내용으로 충무기본계획지침을 변경(99.12 대통령 재가)

□ 調整結果

- 을지연습시(8월 중순경) 도출되는 문제점을 곧바로 다음년도 충무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충무계획 시기 조정

구 분	조정 전	조정 후
기본계획	5월말까지	5월말까지
부처별 집행계획	8월말까지	9월말까지
시도별 시행계획	10월말까지	11.15 까지
시군구별 실시계획	12월말까지	12월말까지

老斤里事件 對策 推進

□ 推進背景

- 6·25 당시 미군이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양민을 학살했다는 AP통신 보도(99.9.30)를 계기로 미 대통령이 엄정한 진상규명 공언
- 「노근리사건」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과 함께 상응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대통령께서 지시(99.10.2 청와대 수석회의시)

□ 推進過程

- 추진체계 구축
 -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구성된 「대책단」(단장 : 국무조정실장)과 대책단 산하에 국방부 인력을 중심으로 한 「진상조사반」(반장 : 국방부 정책보좌관) 운영
 - 조사의 신뢰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전문가(7인)로 구성된 「민간자문위원회」(위원장 : 백선엽) 운영
 - 한·미 양국 조사반 및 자문위원회간 협조체계 구축
- 진상조사 진행상황
 - 자료조사 및 증언청취 등을 통해 주요 의문점을 추출, 미측으로부터 참전군인 증언록을 넘겨받아 검토 중
 - 한미 조사반·자문위원회간 자료공유 및 진상조사활동 협의조정
 - * 그동안 미측이 3차례 방한, 우리측이 2차례 방미
 - 2000.5.18 현재 133명의 신고인에 의해 246명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 向後 推進計劃

- 6월말까지 목표했던 조사기간 연장의 불가피성을 발표(6월중순)
- 주요 의문점에 대한 추가적인 확인검증 조사와 한미간 공동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조사결과 발표
- 진상조사 결과에 따라 사후처리문제 검토

軍畢加點 違憲決定에 따른 對策 推進

□ 推進背景

- '99.12.23 헌법재판소에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및 동시행령 제9조에 대한 위헌결정
- 군복무자에 대한 기존의 지원제도(채용시험안전의 3~5%가산)가 효력을 상실함에 따른 사기양양대책 마련 필요

□ 爭點事項

- 채용시험 응시연령 조정문제
 - 보훈처 : 직급별 공무원 응시연령(상·하한) 조정(3년)
 - 행자부 : 6·7급 및 5급의 하한연령 인하는 곤란, 상한연령을 1~2년 연장
- 군복무기간 경력 인정문제
- 채용시험 합격후 공무원 등 임용시 가점 인정문제

□ 調整經過

- 2000.1.8 총괄조정관 주재 13개 부처청 관계국장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채용시험 응시연령 조정문제
 - ⇒ 제대군인에 대한 군복무기간만큼 상한연령 연장
- 군복무기간 경력인정문제
 - ⇒ 임용전 군복무경력인정을 현행 2할에서 5할로 조정 정부포상시 임용전 군복무경력 인정(퇴직·포상시)
- 채용시험 합격후 공무원 등 임용시 가점 인정문제
 - ⇒ 7·9급 임용추천시 5급처럼 시험만점의 1% 가산

□ 特記事項

- 제기된 「국가사회봉사 가산제도」는 장기과제로 당정협의를 거쳐 도입여부 검토

「인터넷 申聞鼓」管理・運營方案 樹立

□ 推進背景

- 대통령이 새천년 신년사 인터넷 신문고 창설 천명
 -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감시속에 부정부패가 일소되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겠음
 - 정부는 올해부터 「인터넷 신문고」를 창설, 국민으로부터 직접 고발을 받고 국민과 함께 국정을 개혁해 나가겠음
- 추진계획
 - 청와대에서 우리실에 주관부처 선정, 운영방안 등에 대한 부처 의견을 조율해 주도록 요청

□ 調整經過

- 2000.1.14 자치행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회의
 - 청와대, 행자부, 정통부, 반부패특위, 고충처리위 관계관 참석

□ 調整結果

- 「인터넷 신문고」설치 운영・방안(조정결과)
 - 상징적 의미를 감안 「인터넷 신문고」는 청와대(민정)에 개설
 - 운영・관리는 청와대와 고충처리위원회가 협의 추진
 - 통신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행자부, 정통부에서 기술적 지원

※ 각 기관별 인터넷 민원실 운영현황

- 대통령비서실(열린 청와대), 총리실(국민의 소리), 감사원(188신고), 행자부(사이버민원실), 고충처리위(인터넷고충), 법무부(부조리신고센터)등

太白市 地域懸案關聯 對策 樹立

□ 推進背景

- 태백지역에서는 탄광폐광에 따른 대책요구를 위해 집단행동을 강행함에 따라 사회문제화 우려
 - '99.12.12부터 태백지역에서 대규모 집회, 대표자 삭발·농성 등 시작
 - * 일부 극렬행동자의 분신 준비 등 민심이 격화
 - '99.12.23 제2차 쫓겨간대회 개최계획(5,000명 참석 예정)
- 지역주민의 집단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마련 필요

□ 爭點事項

- 태백지역 요구사항
 - (舊)함태탄광 재개발 추진
 - 폐광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자유치활성화 등

□ 調整經過

- '99.12.20,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무조정실장, 행자부·산자부 장관, 건교부·기획예산처차관
- ⇒ 태백지역의 종합적 의견수렴을 위해 「행자부장관」이 현지 출장(12.21), 의견 조율(세부적 사항은 관계부처에서 추진)
- 12.22, 지역대책위 및 총리실·행자부 등 관련국장회의
- 12.23, 행자부장관, 관계부처차관(4) 등 정부관계관 9인 및 주민대표(5) 회의
- ⇒ 태백지역에서 「지역현안대책위」를 구성, 관계부처와 협의토록 통로 개설

□ 調整結果

- 태백시내 3개 탄광(장성, 한보, 태백)에 지원되는 정부석탄가격 지원금은 2000년부터 10년간 1조원 지원하되 폐광시에도 2000년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동금액을 태백시에 지원
- 태백시 주관, 경제활성화를 위한 대체산업 육성계획 수립
 - 용역비(5억원)는 행자부가, 소요재원은 정부에서 지원
- 폐광지역 진흥지구 개발사업의 공공부문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지원
- 정부는 공공 또는 민간연수원 유치를 적극 검토하고, 온천개발에 소요되는 재원을 부담
- 정부내에 「태백지역 현안대책반」 구성·운영 등

共同溝 管理에 대한 關係機關 異見 調整

□ 推進背景

- 여의도 공동구 화재사고시 대두된 공동구 관리의 제반 문제점을 파악, 공동구 관리운영 개선방안 모색 필요

□ 爭點事項

- 지하공동구에도 소방장비를 확보토록 개정된 '94.7 소방법 시행령이 그 이전에 설치된 11개 공동구에 대해서는 소급적용이 안됨
- 도시계획법상 공동구 관리주체가 시장·군수임에도 실제 공동구 관리는 설치기관(한전·한통 등)별로 별도 관리
 - 화재 등 사고발생시에 책임한계 불명확

□ 調整經過

- 2000.2.22·25·28 자치행정심의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 개최(3회)
- 2000.3.2~11 관계기관 합동점검
 - 국무조정실에서 「공동구관리 개선방안(시안)」을 마련, 건교부 등 관계부처에 통보
 - 당실 시안을 토대로 건교부에서 「공동구 관리개선 종합대책」을 마련

□ 調整結果

- 건교부가 「공동구 관리개선 종합대책」마련 시달
 - 공동구 관리주체 일원화
 - 공동구 관리 총괄기관을 「건설교통부」로 지정하고 관리주체를 시장·군수로 일원화
 - 시설보완에 따른 재원분담을 위해 「관계기관협의체」구성(5월중)
 - 소방법시행령·소급적용 개정 조치(개정중)
 - 소방법시행령 개정시까지 소방법령을 우선 소급적용하여 소방시설 확충

地下危險埋設物 關聯 關係機關 異見 調整

□ 推進背景

- 공단지역내 도로밑에 매설된 원료수송용 위험물 배관이
 - 같은 도로내에 고압가스관, 전력관, 통신관, 송유관, 도시가스관 등과 같이 매설되어 있어 연쇄폭발위험이 상존하며
 - 도로법 등에 관리 주체가 불명확하여 관리부실에 따른 위험이 상존
- ⇒ 관리 개선방안 모색 필요

□ 爭點事項

- 공단관련 지하위험매설물 「관리주체」지정 문제
 - 건교부 및 시·도 : 관리주체는 공단 자체가 되어야 함
 - 산자부 : 관리주체는 시·도에서 되어야 함

□ 調整經過

- 2000.3.14 자치행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지하매설물에 대한 제도개선 등은 건교부에서 총괄 추진
 - 단, 건교부에서 종합개선안 및 관련법령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도로법시행령」에 「지하매설위험물」을 주요지하매설물로 규정하여 다른 주요지하매설물과 같이 점용 관리
- 공단관련 지하위험매설물 「관리주체」지정에 대해서는
 - 공단 내는 「공단 자체」에서, 공단 외는 시장·군수책임하에 관리

東海岸 산불被害 支援規模 關係機關 異見 調整

□ 推進背景

-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2000.4.7~15간)로 재산 1001억원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는 바,
 -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점을 고려, 피해복구 지원규모 신속 조정 필요

□ 爭點事項

- 강원도 및 농림부 :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감안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외에 국고지원을 대폭 늘려야 함
- 기획예산처 : 99 경기북부 수행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 국고 지원, 국고지원 외에 특별교부세 지원 등 별도지원방법 강구
- 행정자치부 : 특별교부세는 이미 20억원 지원했으므로 곤란
 - * 강원도 국고지원 요구 : 420억원, 기획예산처 입장: 118억원 국고지원

□ 調整經過

- 2000.5.4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장관회의 개최
 - 국무조정실장, 기획예산처·행자부·농림부 장관, 강원도지사 참석

□ 調整結果

- 강원도 요구(국고지원)사항을 대폭 수용기로 결정(국고지원: 480억원)
 -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 50억원 추가 지원

□ 特記事項

- 조정결과에 따라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2000. 5. 6 지원규모를 확정함.

建設安全管理分野 制度改善 推進

□ 推進背景

-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 시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일부과제에 대해 이견이 제출됨.
- 「건설하도급제도의 개선(건교·재경)」등 3개 과제

□ 爭點事項

- 「건설하도급제도 개선(건교·재경)」에 있어 국가계약법을 개정하여야 하나,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재경)
- 「건설분쟁 조정기능의 강화(건교)」를 위해 별도 통합기구를 실시하는 것보다 국가계약법에 의한 조정위원회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

□ 調整經過

- 2000.4.26, 자치행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3개부처 담당과장 4명)

□ 調整結果

- 원안대로 추진 : 「건설하도급제도 개선(건교·재경)」 외 1건
- 수정 반영 : 「건설분쟁조정 강화(건교·재경)」 1건

□ 特記事項

- 조정결과를 종합대책(안)에 적극 반영조치
- 「건설하도급 제도개선(건교·재경)」 등 조정이 미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통하여 최종 의견수렴

災難・災害의 組織・法律 一元化 方案 講究

□ 推進背景

-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 시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일부과제에 대해 이견이 제출됨.
- 「시민안전신고제 활성화(행자)」등 2개과제

□ 爭點事項

- 「시민안전신고제 활성화(행자)」는 시·군·구 인력부족으로 추진 곤란
- 「안전문화 체험공간 확보 문제(행자·노동·산자·문화·경찰)」관련, 청소년수련원에 안전전시관 설치·운영보다는 안전교육 강화가 시급(문화)

□ 調整經過

- 2000.4.26, 자치행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2개부처)

□ 調整結果：원안대로 추진

- 「청소년수련원에 안전전시관 설치·운영(문화)」은 수련시설의 영세성을 감안, 단계적 추진

□ 特記事項

- 조정결과를 종합대책(안) 마련시 적극 반영조치

安全意識 鼓吹를 위한 對策 推進

□ 推進背景

-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 시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일부과제에 대해 이견이 제출
- 「재해·재난관련 법률 일원화(행자)」등 2개과제

□ 爭點事項

- 「재해·재난관련 법률 일원화(행자)」는 양법의 목적, 재해유형, 지원대상 등이 상이하여 통합실익이 없음
- 「중앙·지방사고대책본부 운영체제 전면 개선(행자)」 관련, 분과별 사고대책본부는 정책결정을 위해 필요하며, 재난유형에 따른 실무반도 운영하므로 별도 인력관리 불요

□ 調整經過

- 2000.4.26, 자치행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수정 반영

- 「재난·재해관련 법률 일원화(행자)」는 추진난이성을 고려하여 중기과제로 추진
- 「중앙·지역사고대책본부 운영체제 전면 개선(행자)」는 상기과제와 연계하여 중기과제로 추진

□ 特記事項

- 조정결과를 종합대책(안) 마련시 적극 반영조치

道路交通安全分野 制度改善 推進

□ 推進背景

- 국가안전관리종합대책 시안을 마련하여 관계부처 업무협의를 실시하였으나, 일부과제에 대해 이견이 제출됨.
- 「도시부 보차 종합도로 속도제한 도입(경찰)」등 5개과제

□ 爭點事項

- 「도시부 보차 종합도로 속도제한 도입(경찰)」은 지방경찰청 고시로 기시행중이므로 도입 불필요
- 「자동차 반사번호판 도입(건교)」은 난반사, 고가, 색상제한 등의 문제점으로 도입 곤란

□ 調整經過

- 2000.4.25, 자치행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3개부처 담당과장 5명)

□ 調整結果

- 원안대로 추진 : 「자동차 반사번호판 도입(건교)」외 2건
- 수정반영 : 「도시부 보차 종합도로 속도제한 도입(경찰)」 1건
- 삭제 : 「도로안전진단제도 도입(건교)」 1건

□ 特記事項

- 조정결과를 종합대책(안)에 적극 반영 조치

住宅建設基準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건교부가 제35회 차관회의(99.8.26)에 제출한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 개정안」이 교육부·문화부·복지부·여성특위 등 관계부처 이견으로 보류
- 일정세대이상 단지에 대한 유치원·보육시설·주민운동시설 등의 의무설치규정을 삭제한 내용에 대해 이견제시

□ 爭點事項

- 교육부·여성특위 : 2천세대이상 주택단지에 대한 유치원의 의무적 설치규정 삭제는 유아교육정책상 불가
- 복지부·여성특위 : 5백세대이상 단지에 대한 보육시설의 의무적 설치규정 삭제는 여성의 사회참여 유도를 위해 불가
- 문화관광부 : 5백세대이상 단지에 대한 주민운동시설의 의무적 설치규정 삭제는 국민건강증진 및 체육진흥정책상 불가

- 건교부 : 주택단지내의 유치원 · 체육시설 · 보육시설 등의 설치
는 세대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정하기 보다 단지의 입
지여건, 입주민의 연령분포 등 단지실정에 따라 자율
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설치의무규정 삭제

□ 調整經過

- 99.9.1 외교안보의정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유치원 · 보육시설의 경우 일정규모이상 단지(유치원 : 2000세대,
보육시설 500세대)에 설치를 의무화하되, 설치예외확대
(예 : 당해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 등으로 동 시설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
- 주민운동시설의 경우 5백세대이상 단지에 설치를 의무화하되,
설치대상시설을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실
외체육시설(농구장 · 당구장 · 볼링장 등 42종) 1개이상으로 완
화

電子商去來技士 資格 新設與否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노동부가 제37회 차관회의(99.9.9)에 제출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정통부·산자부간 이견
- 既存치하는 전자상거래관리사와 별개로 전자상거래기사 자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이견

☐ 爭點事項

- 산자부 : 이미 산자부소관으로 전자상거래관리사 제도를 도입하여 전자상거래에 관한 전문자격자를 양성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전자상거래기사 자격은 불필요
- 정통부 : 전자상거래기사는 통신망의 프로토콜, 정보보호기술 등 기술적 분야를 담당할 예정이므로 전자상거래에 대한 마케팅, 경영관리 등을 담당하는 전자상거래관리사와는 구분됨

☐ 調整經過

- 99.9.16 외교안보의정심의회관 주재로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전자상거래기사와 관리사를 통합하여 운영하고 명칭은 전자상거래관리사로 하고, 주무부처는 산자부·정통부 공동으로 함

林道設置時 關係部處 協議 및 意見聽取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농림부가 제42회 차관회의(99.10.14)에 제출한 「산림법 개정안」에 대해 환경부에서 이견을 제기함에 따라 보류
- 임도설치시 관계행정기관과의 협의규정 신설여부에 대해 이견

□ 爭點事項

- 환경부 : 무분별한 임도설치로 생태계 및 경관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도설치시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 필요
- 농림부 : 산림청에서도 임도설치와 관련된 환경문제 등을 고려하고 있으며 향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임도설치·기준 등을 강화할 예정이나 임도설치시마다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는 것은 곤란

□ 調整經過

- 99.10.27, 11.8 외교안보의정심의회 주재로 관계부처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일정규모이상의 임도설치시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규정 신설
- * 일정규모이상 :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또는 노선 총길이 10km이상

長期 未執行 都市計劃施設 補償財源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건교부가 제46회 차관회의(99.11.11)에 제출한 「도시계획법 개정안」에 대해 행자부·서울시 등 관계부처에서 이견 제시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원마련과 관련하여 이견

□ 爭點事項

- 행자부·서울시 : 장기 미집행시설 보상시 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채권으로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비용중 일부를 국가가 의무적으로 보조·융자토록 하는 규정 필요
- 건설교통부 :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등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보상을 할 수 있으며 국가의 보상비용보조의무 규정은 국가재정 형편상 어려우며 그러한 입법례도 없음

□ 調整經過

- 99.11.12 외교안보의정심의회 주재로 관계부처 과장급 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상시 일정요건의 경우에는 채권 보상도 가능토록 하고, 국고지원 의무화규정은 두지 않되 재원대책을 강구기로 함

著作權法 改正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제46회 차관회의('99.11.11)시 정통부 이견제시로 조건부 의결된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 조정

□ 爭點事項

- 저작권법의 대상에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명시할지 여부
 - 문화부 : 현행 편집저작물의 범위에 사실상 포함되어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명시한것에 불과하므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
 - 정통부 : 데이터베이스는 보호 및 이용증진을 모두 고려해야하므로 권리보호중심의 저작권법이 아니라 별도입법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으므로, 데이터베이스를 명시한 개정내용 삭제 요구

□ 調整經過

- '99.11.12 외교안보의정의관 주재로 문화부 담당 국·과장과 정통부 담당과장 등 7명 참석하에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문화부에 다음과 같은 2개 안을 제시하고 선택하도록 한 결과

<제1안> 데이터베이스를 명시한 규정을 삭제하고, 현행규정유지

<제2안> 데이터베이스를 명시하되, 데이터베이스보호에 관해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와 같이 별도 법률에 의해서 규정하도록 단서 신설

○ 문화부가 제1안을 선택함으로써

- 현행 규정을 유지하고 국무회의에 상정하되,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보호에 관한 규정형식은 추후 논의하는 것으로 결론

地方消防操縦士에 대한 航空手当 新設與否 調整

□ 推進背景

- 제2회 차관회의(2000.1.20)시 기획예산처 이견제시로 조건부 의결된 「지방공무원수당규정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 조정

□ 爭點事項

- 지방소방항공조종사 등에 대한 항공수당 신설 여부
 - 행자부 : 유사분야 종사자인 경찰항공조종사에게 항공수당을 지급함에 따라 연 300만원 가량 보수격차가 있는 점을 감안, 형평성 차원과 보수균형차원에서 항공수당 신설 필요
 - 예산처 : 국가직 소방공무원에게 항공수당이 없고, 소방조종사에 대한 야간근무수당도 보수의 일종으로 볼 때, 경찰항공조종사와 소방항공조종사간에 보수가 균형을 이루고 있으므로 신설 불가
 - 법제처 : 지방의 자주재원으로 수당을 신설·지급하는 것이므로 행자부의 의견이 우선 존중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유사업무에 대한 보수불균형 시정차원에서 항공수당 신설 필요

□ 調整經過

- 2000.1.21 외교안보의정심의관 주재로 행자부 자치운영과장 · 소방과장, 기획예산처 예산기준과 담당사무관, 담당 법제관 등 5명 참석하에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항공수당 신설 인정(원안 유지)
 - 유사분야 종사자인 경찰항공조종사에게 항공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추가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야간근무수당을 제외하고 경찰조종사와 보수를 비교해 볼 때 연 300만원 가량 보수격차가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 형평성 차원과 보수균형차원에서 항공수당 신설 필요
- ⇒ 예산처에서 조정안을 수용한다는 최종입장을 제출함에 따라 원안대로 국무회의에 상정

開放型職位 充員時期 調整

□ 推進背景

- 제6회 차관회의(2000.2.17)시 법무부 이견제시로 조건부 의결된 「개방형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 조정

□ 爭點事項

- 상위직급 결원 발생시에도 개방형 직위를 우선적으로 충원해야 하는지 여부

- 법무부 : 동 조항을 유지할 경우, 상위직급 결원발생시 즉시 승진인사를 단행하고 하위직급의 개방형 충원을 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장관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초래

⇒ ‘상위직급결원 발생시’ 삭제를 요구

- 인사위·행자부 : 장관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요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개방형 직위의 충원을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규정이고, 또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 인사위와 협의할 경우 개방형직위 충원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치가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음

⇒ 원안 유지 주장

□ 調整經過

- 2000.2.18(금) 외교안보의정심의회 주재로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동일직급 결원 발생시에만 개방형직위를 충원하는 것으로 수정
 -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경우, 원안처럼 개방형 충원을 강제하는 규정이 없더라도 시기의 문제만 다소 있을 뿐 개방형 충원은 어차피 이루어질 것인바, 실질적인 효과도 별로없이 장관의 인사권을 제약하는 면이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을 수용하여 동 규정을 삭제

골프장 敷地面積制限 廢止與否 調整

□ 推進背景

- 제2회 차관회의(2000.1.20)시 환경부 이견제시로 조건부 의결된 「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에 대한 관계부처 이견 조정

□ 爭點事項

- 골프장 부지면적제한 폐지 여부
 - 문화부 : 면적제한을 폐지하되, 문화부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현행 제한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골프장내 원형보전지확보율을 20/100에서 30/100으로 상향조정
 - 환경부 : 면적제한을 폐지해야 한다면, 문화부 관련고시를 개정하여 골프장내 원형보전지 확보율을 조건없이 20/100에서 30/100으로 상향조정
 - 규제개혁조정관실 : 문화부 입장에 동의

□ 調整經過

- 2000.1.21(금) 외교안보의정심의관 주제로 문화부 체육진흥과장, 환경부 환경평가과장, 규제개혁조정관실 담당과장 참석하에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문화부 의견을 조정안으로 채택하되 환경부에서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행대로 면적제한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에 상정
 - 「골프장 면적제한 폐지」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면서 환경보전의 측면을 동시에 고려할 때, 환경부 의견은 오히려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수용이 곤란하고,
 - 문화부의 제안이 양 측면을 합리적으로 조화시키는 안이라 판단
- ⇒ 환경부에서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출함에 따라, 현행의 면적제한 규정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국무회의에 상정

□ 經濟調整官室 □

WTO 뉴라운드出帆 對應方案 講究

□ 推進背景

- 99.11.30~12.3간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되는 “WTO 제3차 각료회의”에서 뉴라운드 출범을 위한 협상이 개시되는 바, 우리측의 입장을 확정하여 협상에 임할 필요
- 특히 농업분야는 각료회의 직전에 WTO사무국이 작성한 선언문 초안이 우리의 입장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이에대한 우리측의 치밀한 대응방안 강구 필요

□ 爭點事項

WTO사무국 초안	우리측 입장
○ 어떤 품목도 배제하지 않고 포괄적 시장접근 협상추진	○ 삭제 - UR에서 쌓은 2004년이후 논의인정
○ 농업 국내보조 상당수준(substantial) 감축	○ 국내보조 추가(further) 감축
○ 농업의 비교역적 특성 고려	○ 현행유지 관철
○ 2002.12.15까지 협상완료	○ 협상완료시점 삭제 - 농업분야만 완료시점 규정은 불가

□ 調整經過

- 99.11.22, 대외경제조정 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개최
- 99.11.26, 대외경제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개최

□ 調整結果

- 농업분야의 점진적 자유화, 비교역적 기능인정 등 우리측 현행 입장을 최대한 관철해 나가되, 위원회 결정내용을 넘는 협상안을 수락해야 할 경우 청훈한 후 훈령에 따라 대응

※ 99.12.3일 동협상은 결렬되었으나, 협상과정에서 우리측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되는 등 성과가 있었음

韓 · 칠레 自由貿易協定(FTA) 推進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98.11.5, 대외경제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주요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추진계획」을 의결, 칠레와 우선적으로 FTA를 추진기로 결정
 - 99.9월 양국정상회담시 협상개시에 합의하였으며, 99.12월 1차공식협상, 2000.3월 2차공식협상을 개최
- 협상이 2000년말 체결목표로 진행되면서, 2000.5월 3차공식협상을 앞두고 농산물분야 시장접근에 관하여 통상교섭본부와 농림부간 이견

□ 爭點事項

- 통상교섭본부
 - 칠레측의 최대관심분야인 농산물분야에 대해 농림부가 제시한 시장 접근 양허안이 너무 소극적이므로 원활한 협상진행을 위해 보다 개방적인 양허안 제시 필요
- 농림부
 - 우리의 관세구조, 농산물개방의 민감성, 칠레측이 현재까지 제시한 양허안 등을 고려, 이번 협상에서는 농림부안대로 협상에 임하고, 추후 칠레측의 관심품목 등을 고려, 보다 개방된 양허안 제시

□ 調整經過

- 2000.4.29, 대외경제조정 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개최

□ 調整結果

- 향후 2~3차례 추가협상이 남아있고, 칠레측의 양허안 내용도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된 상태가 아니므로 제3차협상에서는 농림부안대로 협상
 - ※ 5.16~19일간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3차협상에서 우리측은 동 조정안을 토대로 양허안을 제시

對外金融情報시스템(FIU) 構築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대외금융정보시스템(FIU, Financial Intelligence Unit)은 마약·도박 등의 범죄와 연계한 자금세탁 및 불법유출입 방지를 위한 종합금융정보체계로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혐의있는 금융거래 및 일정규모 이상의 현금거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법집행기관에 통보하여 원활한 수사 등을 지원
- 현재 자금세탁 행위의 규제·처벌을 규정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이 정치권 사정으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 2000년말 외환시장 완전자유화에 따른 불법자금의 해외유출에 대비, 이를 감시하기 위한 체제로 우선 외화거래만을 대상으로 FIU구축을 추진할 것을 재정부에서 건의

□ 爭點事項

- 재정부 : 제2단계 외환자유화 추진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FIU를 재정부 소속으로 연말까지 설립

- 법무부 : FIU는 정보수요기관인 검찰청·국세청·관세청 등 법집행기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외환거래에만 한정해서는 실효성이 없으므로 원貨를 포함한 모든 금융거래를 대상으로 해야함

□ 調整經過

- '2000. 2. 16 경제조정관 주재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2000년말로 예정된 외환거래자유화의 보완대책이 시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외환거래만을 대상으로 하는 FIU를 2000. 10월까지 재정부 소속으로 설치하기로 합의
- 법무부는 제도조사반장으로 과장급 검사와 검찰수사관을 파견하고, 국세청·관세청·한은 등에서도 관련직원을 파견하여 FIU 설치에 적극 협조

□ 特記事項

- FIU 구축추진을 위한 작업팀으로 「FIU구축기획단」을 설치
 - 「대외금융거래정보시스템구축준비단구성·운영에관한규정」을 국무총리 훈령 제401호로 제정(2000. 4. 4)

高額特別福券 發行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99년말 주택복권에서 최고당첨금 20억원의 1회성 특별복권인 「밀레니엄복권」을 발행한 이후 각 부처에서 경쟁적으로 1회성 추첨식 특별복권을 발행
- 최고당첨금 20~30억원의 특별복권 발행을 남발하게 됨에 따라 기금조성 차질과 과도한 사행심 조장으로 건전한 사회분위기를 해칠 우려 고조

※ 종전에는 당시 경제조정관 주재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복권의 발행물량, 최고당첨금 등을 조정하였으나 신규복권을 규제할 수 없는 등 실효성 미비, 복권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완화 등의 사유로 '98.12.31 폐지

□ 爭點事項

- 복권을 발행하고 있는 8개 부처(건교부, 문화부, 과기부, 노동부, 중소기업청, 행자부, 제주도, 산림청)에서 고액 특별복권 발행을 정례화하려는 움직임

□ 調整經過

- 당실 검토결과 ‘복권발행조정조정위원회’를 대체하는 공익성 확보 기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발행기관간 주요사항 논의를 위한 ‘복권발행협의회’ 구성을 권고
- 2000. 3. 9, 4. 6 2차에 걸쳐 8개부처 실무자회의 개최

□ 調整結果

- 각 부처 복권담당과장을 위원으로 하는 ‘복권발행협의회’ (위원장 : 건교부 주택도시국장, 간사기관 : 건교부) 구성

※ 당실은 담당과장이 자문위원으로 참석

- 동 ‘복권발행협의회’에서 특별복권 발행을 기관별 연 1회로 제한하고, 최고당첨금은 10억원 이내로 하기로 의결

7~10人乗 乗合車の LPG使用問題 調整

□ 推進背景

- 현행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상 영업용 택시를 제외한 승용차는 LPG를 사용할 수 없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7~10인승 승합차는 2000.1부터 승용차로 분류됨에 따라 LPG사용 계속 허용문제가 제기

□ 爭點事項

- 재경부, 산자부, 환경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고 유예기간중 에너지가격 현실화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 현행 차량분류가 그대로 유지되어 경차의 LPG사용 요구를 불허하는 데 명분 제공
 - 차량연료 가격체계는 매우 복잡하고 연간 10조원 이상의 세수와도 관련이 있어 LPG포함 전반적인 유종간 가격격차 해소 방안 검토가 필요
- 건교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2000.1.1.부터 시행하되,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7~10인승 승합차에 대해서는 일정기간(예 :5년) LPG 계속사용을 허용

- 1년내에 에너지 가격구조를 개선하기는 불가능하므로 1년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또다시 개정하는 것보다 장기유예를 할 수 있는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시 미국산 7~10인승 차량의 계속 승합차 분류 요구, 승용차와 승합차간 상이한 시험기준 적용 등으로 미국 및 WTO와의 마찰 우려

□ 調整經過

- '99.10.22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99.10.23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7~10인승 승합차를 승용차로 구분하는 것을 당초 2000.1.1에서 2001.1.1로 1년 연기하고, 2000년중 유종간 가격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동 규칙의 시행시기를 2000.1.1에서 2001.1.1로 1년간 연기
- 7~10인승 승합차를 현재와 같이 승합차로 존치
- 유예기간중 유종별 가격구조 개선방안을 수립, 시행
- 관련 부처 및 전문연구기관 등으로 기획단 구성, 2000년 상반기중 연구용역을 완료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방침 확정 후 입법조치

淸州 地域煖房 使用燃料 調整

□ 推進背景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청주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설치 (사용연료 : 저황왁스유)를 완료 하였으나
 - 환경부와 충청북도는 환경부의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사용연료를 LNG로 교체할 것을 요구

□ 爭點事項

- 산업자원부, 한국지역난방공사
 - 92년 산업자원부의 집단에너지 공급지역 지정 당시, 사용연료는 벙커C유 이었으나, 청주시의 대기환경을 고려하여 저황 왁스유(LSWR, 황함유 0.3%)로 교체하였음
- 환경부, 충청북도
 - 청주시는 청정연료사용 대상지역이므로 반드시 LNG만 사용

□ 調整經過

- '99.10.11,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청주지역 집단에너지 공급시설의 사용연료에 대한 청주지역 주민의 정서와 청주지역의 대기오염 상태를 고려하여 1년 6개월 내에 환경부가 동의하는 수준의 배연탈황시설을 설치하고 다만, 배연탈황시설 설치후 사용연료에 대하여는 추후 환경부와 협의함
- 환경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배연탈황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충청북도로 하여금 대기오염배출시설 설치신고서를 수리토록 협조하며, 충청북도는 이를 적극 수용함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설치중인 집단에너지시설의 시험 가동을 '99.12월까지 완료함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99년도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의 월동을 위하여 이동식 보일러를 최대한 활용함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빠른 시간내에 청주지역에서 집단에너지 공급관련 설명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와 청주시는 청주시 대기오염상황과 집단에너지시설의 효용성, 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하여 지역주민이 최대한 이해토록 협조함

百貨店 등 無料셔틀버스 運行 改善

□ 推進背景

- '99.9월말부터 운수업계 및 중소유통업계가 지역별로 백화점등의 무료셔틀버스의 운행정지를 요청하는 집단민원을 산자부, 건교부등 관계부처에 제출(범부처차원의 조정필요성이 제기)

□ 爭點事項

○ 산자부

- 셔틀버스문제는 운수업계의 이해관계와 직결된 교통행정상의 문제로서 유통산업발전법으로는 근원적인 문제해결 곤란
 - * 셔틀버스문제는 9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셔틀버스 신고제 폐지이후 야기

○ 건교부

- 운수업계는 셔틀버스의 전면운행금지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제도개선책으로 자가용 자동차의 무임운송사업 등록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운수업계의 반발로 추진이 보류된 상태

○ 공정거래위원회

- 셔틀버스 운행이 어느정도 고객유인 효과가 있다고 하겠으나 경쟁상대방의 고객을 부당하게 유인한다고는 보기 어려움(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 調整經過

- 99. 11.19, 12.3 산업심의회 주재 관계부처 실무회의(2회) 개최
 - 산자부, 건교부, 공정위, 행자부, 서울시 담당과장 참석,

□ 調整結果

- 셔틀버스의 운영을 규제할 근거법이 없으므로 정부의 즉각적인 개입은 곤란
 - * 분당 신도시등 지역주민 대부분은 셔틀버스 감축을 반대
- '99년 말까지 유통업계의 자율결의 이행상황을 지켜보고 2000년초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감축효과 등을 평가한 후, 추가 감축 및 제도개선방안을 논의
 - 자율결의 사항이 최대한 준수되도록 행정지도 강화(산자부)
 - 지입·위탁운행 등 불법 운송행위 강력단속 실시(건교부)
 - 자율결의 사항 이행상황 평가후 문제점 보완 및 제도 개선
(산자부, 건교부)
- * 백화점등 유통업계의 자율결의 내용(10.21. 10.25)
 - '99년말까지 운행대수(30% 감축), 운행회수(1일 10회 이내), 운행거리(반경 10km)등의 감축을 통해 현행대비 약 50%의 감축효과 예상

辨理士 法人制度 導入에 따른 「特許法律法人」名稱使用 調整

□ 推進背景

- 변리사법 개정안 마련시('99.9월) 변리사 사무소의 대형화,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특허관련 법인제도를 도입하고 '특허법률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爭點事項

○ 법무부

- 특허법률법인은 법무법인의 유사명칭에 해당되어 변호사법에 저촉되므로 법체계에 반함
 - ※ 변호사법 제30조·제34조제2항에 의하면 변호사는 그 직무를 조직적, 전문적으로 행하기 위하여 '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법무법인이 아닌 자는 '법무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
- 변리사에게 법률법인 명칭사용을 허용하면 세무사, 관세사 등 유사 법조직역으로 과장이 확산되어 법질서 혼란 초래
- 기존 특허법률사무소 명칭사용은 묵인방치되어 온 것으로서 변호사법상 처벌대상임에도 오히려 이를 법제화함은 부당
- 따라서 “특허법률법인” 명칭 사용은 불가하고 “특허(변리)법인” 명칭 사용 요망

○ 특허청

- 변리사는 특허, 상표, 의장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변리사로 구성된 법인이 특허법률법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
- 변리사는 산업재산권분야에 있어서 소송대리라는 사법적 기능도 수행하여 세무사, 관세사 등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주장처럼 명칭사용 확산우려가 없음
- 비변호사출신 개인변리사의 경우 '47년부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특허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등록하여 사용해 옴

□ 調整經過

- 99.10.28 경제조정관 주재로 협의 및 조정
- 99.11.22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협의 및 조정

□ 調整結果

- 변리사법 제8조에 변리사로 하여금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업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률법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변호사법상(유사명칭 사용금지)에 저촉된다고 할 수 없음
- 또한 개인변리사 사무소 명칭을 오래전부터 관행적으로 특허법률사무소로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명칭사용을 새로 규제할 명분이 미약
- 다만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를 위해서 시간이 필요하므로 변리사 법인 명칭문제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조정('99.11.22)

石灰石鑛山 등에 의한 自然毀損 防止對策 마련

□ 推進背景

- 국무총리 지시(2000.4.12)에 의거 석회석광산·화강암 채석장등의 개발에 따른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산지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개선 대책을 마련

□ 爭點事項

- 산림청 : 현행 석회석광산의 채광제도 및 형질변경제도 등은 자연보전측면보다는 개발우선원칙에 기초를 둔 것으로 제도개선 필요
- 산자부 : 국내시멘트산업의 수급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광업법상의 현행 채광제도 등 존치 필요

□ 推進經過

-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구성(4.17)
 - 산림청장을 단장으로 관계부처 국장을 반장으로 하는 제도개선반, 환경조사반, 산업대책반 등 3개 대책반 구성·운영
- 석회석광산 자연훼손실태 및 환경오염실태 현지조사
 - 강원 삼척, 경북 단양 등 주요 지역에 관계부처 합동조사단 파견 (4.21-4.22)
 - 산지훼손실태 항공 촬영 : 4.25

- 산지복구기술 · 관련제도 등에 대한 조사단, 일본파견(5.14-5.20)
 - 산림청, 산자부, 시멘트업계 등 民官합동으로 조사단 구성
 - 통산성 및 석회석광산 3개소(武甲, 伊佐, 東谷광산) 방문

□ 調整經過

- 2000. 4.17 : 경제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 2000. 5. 3 : 산업심의회관주재로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 2000. 6. 5 : 경제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 調整結果

- 국내 석회석광산 등에 의한 산지훼손실태 조사내용과 외국 제도등을 토대로 보다 항구적인 개선대책을 마련
 - 채광인가제도(광업법상 채광계획인가시 산림법상의 형질변경허가 의제처리 등) 및 형질변경제도 개선, 채광을 빙자한 채석방지 근절, 복구비 예치기준 상향조정 등
- * 현재, 산림청이 제시한 제도개선방안을 산자부등 관계부처에서 실무검토중이며,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실 주재로 조정절차를 추진할 계획

몽골 등 國家別 産業研修生 配定人員 調整

□ 推進背景

- '99.5월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 '99.12월 몽골총리 방한 및 2000.1월 법무부장관의 몽골 공식방문시 몽골측이 계속적으로 자국의 산업연수생 배정인원 증원을 요청
- 법무부가 몽골 산업연수생 배정인원을 현행 500명에서 네팔·미얀마 수준(1,000~1,500명)으로의 증원 건의

□ 爭點事項

- 노동부
 - 현재 국내 실업문제 등을 고려할 경우 외국인 연수생의 증원은 곤란
 - 다만, 국익차원에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연수생 총정원(79,000명) 범위내에서 몽골의 배정인원을 증원함이 바람직
- 중기청
 - 실업난속에서도 영세중소기업의 생산현장인력난 지속
 - 산업연수생 총정원(79,000명) 규모가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 몽골연수생을 1,000~1,500명으로 증원하는 것은 곤란

□ 調整經過

- 2000.2.10 산업심의회 주재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 2000.2.14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실무회의 개최

□ 調整結果

- 국내실업문제 등을 고려할 때 총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부적절
 - 총정원의 증원문제는 하반기중 국내실업, 중소기업의 인력수급현황, 수요업체의 국별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계부처와 협의·조정
- 몽골을 포함한 국가별 연수생의 인원조정은 현행 총정원(14개국, 79,000명) 범위내에서 배정인원의 미소진율, 이탈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시토록 함
- * 조정회의후 중기청은 미소진율, 이탈율, 질병, 노동생산성, 수요업체의 국별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몽골등 국가별 산업연수생 배정인원을 조정 (2월말)
 - 증원(+5,300명) : 중국(+3,541), 몽골(+400), 카자흐스탄(+371), 인도네시아(+95), 태국(+370), 네 팔(+332), 우즈베크(+117),파키스탄(+74)
 - 감축(△5,300명) : 필리핀(△346), 베트남(△963), 스리랑카(△625), 미얀마(△236), 이란(△372), 방글라데시(△2,758)

氣候變化協約 對應 綜合對策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93.12월 우리나라는 기후변화협약에 가입한 이래, 선진국으로부터 이산화탄소 감축의무를 부담토록 압력을 받고 있음.
-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에서 별도로 추진해오던 기후변화협약 업무를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하여 사회 모든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대책을 마련 필요

□ 爭點事項

- 각종 온실가스 배출관련 통계의 정리 및 활용방법
- 외국의 온실가스 거래제도에 대한 연구 및 우리에 대한 영향평가
- 산업자원부와 건설교통부간 모든 건축물에 고효율 조명기기 사용 의무화 및 경차보급 촉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 산업자원부와 환경부간 에너지이용합리화 법령 개정문제

□ 調整結果

- '98. 6월부터 2000.6월까지 총 21차례의 경제조정관 주재 기후변화협약 실무대책회의를 개최
 - 기후변화협약 관련 부처간 쟁점사항을 조정하고 세부시행계획(안)을 마련·시행중
 - * '98.12월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2000.2월 기후변화협약 대응 종합대책 세부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추진중

에너지 消費節約 推進體系 構築

□ 推進背景

- '99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고유가로 인해 에너지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으나, 우리의 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상승
- 2000년 에너지수입액 10억불 절감을 목표로 범국민적 에너지 소비절약 운동의 강력추진을 위해 「에너지소비절약 정부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

□ 調整結果

- 「공공기관 에너지절약 추진지침(국무총리지시 제1999-22호, '99. 9. 8)」에 의거
 - 현재 각 기관별로 추진중인 에너지 소비절약 추진체계를 국무총리실 산자·행자·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에너지관리공단 합동으로 「정부합동점검반」을 구성(15명내외, '00.12월말까지 한시적운영)
- 정부합동점검반 아래 공공기관점검반, 산업체점검반, 법·제도정비반 등 3개 실무대책반을 편성하여
 -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등의 에너지절약 추진실태 및 ESCO사업 추진현황
 - 정부의 에너지 시설투자 자금을 지원받는 업체(자발적협약 체결업체 포함)등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파악 등

마포 石油備蓄基地 移轉 調整

□ 推進背景

- 서울시는 2002년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해, 현 상암동 월드컵경기장 인근의 석유비축기지 이전을 대통령께 건의 ('99. 7.14)

□ 爭點事項

- 산자부·석유공사 : 서울시는 대체부지와 신규 비축기지의 건설사업비(약 110억원) 부담
- 비상기획위원회 : 대체부지 후보지(고양시 성석동)는 안보상의 이유로 불가
- 서울시 : 적정부지가 없으므로 현재의 K기지에 용량을 증설, 신규 비축기지의 건설사업비는 시의회 반대로 지원곤란

□ 調整經過

- 2000. 6. 현재 조정 협의중

□ 調整方向

- 조속한 시일내 비축유를 Y기지로 송출하고 K기지 용량 증설방안 검토 (서울시 적극 지원)
- 마포기지 원상회복(약 12억 추정)과 비축석유 이송비용(약 3억)은 서울시가 부담

벤처 推進施策의 效率化 推進

□ 推進背景

- 정부가 자금, 입지 등 각종 벤처 지원제도를 구축하여 단기간에 벤처육성 성과를 이끌어 냈으나, 자금지원 중복문제 등 지금까지 구축된 지원제도를 내실화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성 제기

□ 調整經過

- 서울인터넷 창업보육센터, 서울창업 보육센터 방문 (2000. 1)
- 연세대, 서강대 창업보육센터 방문 (2000. 1)
- 전문가, 이스라엘의 벤처기업 실태조사 (2000. 2)
- 조정관 주재 벤처기업 육성 관계기관 및 전문가회의 (2.26)

□ 調整結果

- 12개부처 83종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중심으로 정비
- 창업보육센터에 기업경영 경험이 풍부한 Manager제를 도입하여 기술과 아이디어로 창업하는 벤처기업의 미진한 경영측면을 보완하는 방안 검토
- 인터넷 열기와 맞물려 벤처기업이 정보통신 분야에 집중되고 있는바, 이를 생명공학·부품소재 등 다양한 분야에도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창업에 필요한 입지, 정부, 세무, 회계 등의 서비스를 One-Stop으로 제공할 수 있는 Center 설립을 지원

Y2K問題 對策 推進

□ 推進背景

- Y2K문제가 발생할 경우 정보체계에 혼란을 가져와 사회 각 분야에 엄청난 피해가 야기될 우려
- Y2K문제가 갖는 ① 해결시한의 제약성 ② 문제발생의 광범위성의 특성을 감안하여 당실에서 주도적으로 국가사회 전반의 Y2K문제 해결을 추진

□ 主要 推進內容

-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13대 중점분야를 선정하고, 추진상황을 월별로 점검
 - 13대 중점분야 : 금융, 전력/에너지, 원전, 의료, 운송, 해운항만, 중소기업, 환경, 수자원, 국방, 행정, 통신, 산업자동화 설비
 - * 중점분야 이외에도 교육, 4대 사회보험, 대형건축물 등 Y2K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점검
- Y2K문제에 대하여 국민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차분히 대응할 수 있는 대책 추진
 - 99.5 「Y2K캠페인 주간」을 설정하여 가정용품의 Y2K문제 점검을 위한 「Y2K 국민 대응안내문」 300만부 배포
 - 99.11 꼭 필요한 현금인출 등 10대 준비사항을 중심으로 「Y2K 국민대처 요령」을 제작·배포

○ Y2K 비상대비계획 수립

- 모든 기관의 Y2K 비상대비계획은 99.11월말까지 완료하고,
‘99.12월중 2차례에 걸쳐 범정부 차원의 비상대처 훈련 실시
 - * Y2K 비상대비계획은 중앙안전대책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에 확정된바
에 따라 재난대비 차원까지 포함하여 수립
- Y2K 정부종합상황실(실장:정통부차관)을 설치하여 연말연시에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전국 주요 분야에 약47만명이
비상대기

□ 調整 經過

- 98.4월이후 18차례 「Y2K문제 대책협의회(위원장:경제조정관)」를 개
최하여 사회 각분야의 Y2K 추진상황 점검
- 99년 5차례(1.14, 3.31, 9.15, 12.1, 12.24) 「Y2K 관계장관회의
(위원장:국무총리)」를 개최하여 Y2K 주요정책을 협의·
확정하고, 중점분야의 Y2K 추진상황 점검

□ 推進結果

- 금융, 전력, 운송, 의료 등 사회의 주요분야는 예상대로
정상가동하였으며
- 아파트 난방제어 장비, 비디오 대여점 등 경미한 16건의
Y2K문제가 발생하여 신속히 복구

超高速 情報通信網構築 點檢團 運營

□ 推進背景

-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인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계획에 대한 정밀확인팀을 구성하여 기술·품질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고, 필요시 범정부차원의 지원방안 강구

□ 調整經過

- 2000.3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 점검단 운영
 - 구성 : 경제조정관(단장), 정통부·기획예산처 담당국장, 한국통신·데이콤·하나로통신·두루넷 담당임원, 한국전산원 국가정보화센터장, 전자통신연구원 교환전송기술연구소장, 서울대·연세대 교수 각 1명
 - 기능 :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 기관별 계획·실적 및 품질점검, 각 기관별 추진상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지원방안 강구
- 2000.3.10 점검회의 개최
 - 사업자별 초고속망 구축실적 및 향후계획
 - 인터넷 이용증가에 대비한 인프라 확충방안
 - 차세대 인터넷 개발계획 등

□ 調整結果

- 정보 유통량의 급격한 증가로 향후 5년간 현재의 1,000배의 이용량을 수용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방안 강구
- 사업자별 애로 및 건의사항의 지속적 파악 및 정부차원의 지원방안 강구

國家情報化事業 總括・調整

□ 推進背景

- 국가사회 전반에 걸쳐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정보화」의 방향을 점검・조정하고,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애로사항과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동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장)를 운영

□ 調整結果

- 1999.9.15 제11차 정보화추진위원회 개최
 - 2000년도 분야별 정보화촉진시행계획 심의・의결
 - * 외교・형사사법・국방・행정・지역・국가안전관리・교육・과학기술・문화・농림・산업・보건복지・환경・산업인력・사회간접자본・해양수산・정보보호・공안・입법・사법・금융 등 21개분야
 - 「전자정부 종합실천계획」, 「99년도 정보화사업평가결과」, 「정보통신산업 발전계획」등 심의・의결
 - * 1999.8.20 동 실무위원회 개최
- 2000.3.14 제12차 정보화추진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 「뉴밀레니엄시대를 대비한 2000년도 법제도 정비계획」, 「국가정보화 평가계획」, 「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개편안」, 「2001년도 정보화추진시행계획 작성지침」 등 심의・의결
 - * 2000.2.17 동 실무위원회 개최

사이버테러 防止業務 推進體系 定立

□ 推進背景

- 2000.2.25 「제1차 사이버테러방지 관계장관회의」시 장관회의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할 사무국 기능을 어느 부처에서 수행할 것인지에 대해 문제 제기
- 국무조정실에서 관계부처 국장회의를 소집하여 추진체계를 협의하기로 함

□ 調整經過

- 2000. 3. 3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사이버테러 방지 업무 추진체계
 - 관련법령 제정
 - 신고센터 운영 방법 등

□ 調整結果

- 국가 및 공공기관의 사이버테러 방지 업무는 국정원에서 담당하고, 민간 부문의 사이버테러 방지 업무는 정통부에서 담당하기로 함
- 국무조정실은 「사이버테러방지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

* 공공기관의 구체적인 범위는 훈령제정시 추후 협의

財政情報化分科委員會 主管部處 指定

□ 推進背景

- 제12차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서면의결(2000.3.14)에 따라 신설된 재정정보화분과위원회의 주관부처 지정 필요성 제기

□ 爭點事項

○ 재정경제부

- 예산·자금·국유재산·세입·세출·기금·채권·채무 등 재정정보화분과위원회의 기능중 재정경제부의 소관 업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재정경제부가 주관부처가 되어야 함

○ 기획예산처

- 동 위원회의 기능중에는 재정운영의 첫단계인 ‘예산편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정보시스템 구축 등 기획예산처 소관 사항이 있고, 재정정보화관련 예산편성의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기획예산처가 주관부처가 되어야 함

□ 調整經過

- 2000. 3.30 산업심의관 주재 관련부처 실무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재정정보화분과위원회의 주관부처는 재정경제부로 하되, 동 위원회 운영세칙에 예산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와 긴밀히 협의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기로 함

原子力研究開發基金 料率 調整

□ 推進背景

- 원자력 연구개발 기금요율은 매 3년마다 재조정 하도록 되어있어 2000년부터 새로운 요율적용을 위해 과기부와 산자부가 실무협의를 촉진했으나 상호 이견으로 요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함

□ 爭點事項

- 과기부 : 기금요율을 1.55원/Kwh 상향조정
- 산자부 : 기금요율을 0.75원/Kwh으로 하향조정

□ 調整經過

- 99.10 요율검토위원회 구성
(위원장 : 산업심의관, 관련부처국장 및 민간전문가)
- 99.10~11 5차에 걸친 요율검토위원회 개최
- 99.11 경 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최종 합의

□ 調整結果

- 국가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원자력 연구개발 기술에 대한 한전의 부담금 요율은 현재 요율인 1.25원/Kwh를 유지함

仁川國際空港 磁氣浮上列車 導入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자기부상열차의 국제적인 개발상황, 국내 개발투자 상황, 실용화 필요성 등 고려시 설치 필요성이 대두
- 그러나 사업실패의 위험성, 열차운행과 관련된 각종 사고의 우려 등으로 인천국제공항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건교부와 과기부간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 제기

< 사업개요(안) >

- 노 선 : 1.6km (공항여객청사와 국제업무지역간), 복선
- 최고속도 : 100km/h
- 사 업 비 : 800억원 (차량, 건설비, 역사 등)

□ 爭點事項

- 건교부 : 연구개발 성과는 인정되나 자기부상열차의 신뢰성이 불확실하며, 현단계는 시험적 성격이어서 인천국제공항내 설치 부적합
- 과기부 : 공항의 첨단성 유지와 투자효율성면에서 자기부상열차 도입이 바람직

□ 調整經過

- 99.5.3, 9.13 경제조정관 주재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자기부상열차 도입은 경제성이 없고, 신뢰성·안전성이 미검증되어 인천국제공항 2단계 사업착수 준비 단계인 2003년 이후에나 검토 가능
- 자기부상열차에 대해 민간기업 투자 가능성이 적으므로 수요가 생길때까지 당분간 최소한의 연구개발사업비에 대한 정부지원 검토

□ 特記事項

- 현재까지의 자기부상열차관련 연구성과를 DB화하여 보존하고 향후 실용화 단계에서 활용토록 함

仁川國際空港 免稅店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운영자 선정방식과 관련하여 건교부·문화부간에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면세점 규모 >

- 총 36개 매장 7,742㎡ (전체 195개 29,231㎡)

□ 爭點事項

- 건교부 및 공항공사 : 관광공사를 포함한 모든 사업희망자는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해야 하며, 수의계약 등은 불가
- 문화부 및 관광공사 : 관광개발사업 등 관광진흥을 위해 재원 확보가 시급하므로 관광공사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면세점 운영권을 주고 임대료도 저렴하게 징수
- 기획예산처 : 면세점 일부를 관광공사에 할당하되 임대료는 타사업자와 동일하게 징수하고, 관광진흥사업의 부족 재원은 국고에서 지원

□ 調整經過

- '99.10.12 경제조정관 주재로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인천국제공항의 면세점 일부를 한국관광공사에 할당하되 임대료는 타사업자와 동일하게 징수
- 관광공사에 할당할 면세점 규모는 관광진흥사업 재정소요, 면세점 매출 예상액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기획예산처와 건교부가 협의하여 결정
- 관광진흥사업에 대한 부족재원을 국고에서 지원

□ 特記事項

- 조정결과의 WTO협정 저촉여부에 대한 확인결과 50% 이내 수의계약은 WTO협정 위배가능성 희박(외교통상부, 공항공사 고문변호사)

國家地理情報體系(NGIS)法 制定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지리정보체계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등을 추진할 필요성 대두
- 이를 규정할 법률제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爭點事項

< 추진체계 >

- 정 통 부 : 정보화추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체계내에서 분과위원회의 하나로 NGIS추진위원회 (위원장 : 건교부 차관)를 구성·운영
- 건 교 부 : NGIS추진위원회(위원장 : 건교부 장관)를 별도로 구성·운영
- 기획예산처 : NGIS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되, 위원장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조정실장으로 함 (행자부 같은 의견)

< 기 타 >

- 지리정보체계의 표준화 주관기관 문제(정통부, 산자부)

□ 調整經過

- 99. 9.6, 9.16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관계부처회의(2회)
- 99. 9.27, 10.5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회의(2회)

□ 調整結果

- 건교부장관이 위원장인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되, 기본계획은 동위원회 심의·의결후 「정보화추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확정
- 국가지리정보체계 추진과 관련하여 행자부 등 관련부처의 역할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강구함
- 추진체계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간 협의 추진

□ 特記事項

- 2000.1.21 「국가지리정보체계의구축및활용에관한법률」 제정·공포

高速道路 通行料紛爭 調整

□ 推進背景

- ‘95.11~’99.2 동안 한시적으로 유보하였던 관교 톨게이트 통행료 징수를 ‘99.2월 재개함에 따라 분당주민이 통행료 납부에 대한 민원제기
- 이를 계기로 전국 13개 톨게이트 지역에서 통행료 면제·인하 요구
 - ※ 주요분쟁지역 : 관교, 구리, 토평, 인천, 칠곡, 울산, 양산, 풍수원, 곡성, 마산, 옥계, 담양, 동광양 등

□ 爭點事項

- 분당 주민들은 대체우회도로 부족, 최저요금의 과다한 인상 등을 이유로 통행료 면제를 요구
- 건교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 비용, 일반국민과의 형평성 문제등을 고려할때 통행료징수가 불가피

□ 調整經過

- ‘99. 2.27 관교톨게이트 통행료 징수 재개
- ‘99. 4. 2 분당주민 통행료 징수 무효확인 행정심판제기

- '99. 6.11 행정심판결과 '통행료 징수는 정당' 의결
- '99. 8.17 행정심판불복, 통행료 징수 무효확인 행정소송제기
- '99. 9 통행료 거부 집단행동
- '99.10 총리실에서 통행료 산정근거, 15km이내 단거리 고속도로에 대한 출근시간 통행료 면제방안등을 검토조치

□ 調整結果

- 2000.1.10부터 고속도로를 단거리(20km미만, 191개소)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퇴근 예매권 소지한 경우 통행료 할인
 - 통행료 최고 30% 할인(예매권 미소지 차량은 최저요금 1,100원 징수)
 - 할인시간대 : 출퇴근 각각 2시간
- 2000.3.28부터 할인시간대를 출퇴근 각각 2시간 → 출근시 3시간, 퇴근시 4시간으로 확대 시행

□ 特記事項

- 전국 191개소 日 통과차량 약 36만5천여대 수혜 기대
- 「고속도로 통행료 체계 개편안」이 시행(2000년 하반기 예정) 되면 예매권 제도는 새로운 통행료 체계내로 흡수

過密負擔金 地自體 歸屬分 上向調整

□ 推進背景

-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를 위해 서울시내 대형건축물에 부과하는 과밀부담금 수입의 배분비율 조정을 건의
 - 현재 국고 50%, 서울시(본청) 50%
 - 국고 40%, 서울시 30%, 자치구 30%
- ※ 과밀부담금 : 서울시내 대형건축물(판매용 15천㎡, 업무·복합용 25천㎡ 이상)에 대해 건축비의 10%를 부과하고, 이중 국고분은 토지특별회계에 귀속

□ 爭點事項

- 건설교통부 : 「토지특별회계」의 세입감소로 개발촉진지구사업 지원을 연기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 국고귀속분을 40%로 감축하는 방안은 수용 곤란
- 서울특별시 : 국고귀속분의 감축없이 서울시(본청) 귀속분 50% 범위내에서 시본청과 자치구간의 재배분은 수용곤란

□ 調整經過

- '99.11.12 경제조정관 주재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잠정적으로 과밀부담금의 귀속비율을 국고 50%, 서울시 본청 40%, 자치구 10%로 조정
- 국고귀속분에서의 자치구 지원여부는 「토지특별회계」의 재정사정 등 여건이 호전된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함

中部圏 内陸貨物基地 立地選定

□ 推進背景

- '98.2월 중부권 내륙화물기지로 충북 청원군 부용면 문곡리와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선정
- 감사원에서 분리 건설에 따른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을 지적 ('98.6)함에 따라 충북·남의 경계지역인 충북 청원군 부용면 갈산리와 충남 연기군 동면 응암리(21만평) 선정
- 관계부처 협의중 농림부가 이견을 제시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爭點事項

- 농림부 : 화물기지 총21만평중 농업진흥구역 7.3만평, 특히 우량농지('95년 경지정리) 3.7만평이 포함
→ 기지입지 변경 또는 우량농지 3.7만평 제외 요구
- 건교부 : 공동유치과정을 고려할 때 입지변경불가 및 우량농지를 제척할 경우 철도인입 등 현지 여건으로 보아 공사시행 불가

□ 調整經過

- '99.11.25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관계부처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우량농지중 일부(1.3만평, 충남 응암지구)를 제척하고, 대신 서측의 임야지역을 편입하기로 함

首都圈 自然保全圈域內 觀光地 造成 調整

□ 推進背景

-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차원에서 자원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을 허용하기 위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개정 필요성 대두
- 개정 내용에 대해 경기도와 여타 지자체(서울, 대전, 충청남·북도, 강원도)간에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爭點事項

- 경기도 : 관광단지 개발에 외국기업의 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미리 개정해 놓아야 함
- 강원도 : 국토의 균형발전과 한강수계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입법취지에 맞지 않음
- 서울·대전·충청남·북도 : 수도권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개발은 상수원 수질보호, 수도권 과밀억제 정책에 상반됨

□ 調整經過

- '99.3.11, 7.15, 7.23 경제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및 시·도 조정회의 개최
- '99.8.17, 12.1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허용은 지역균형개발, 권역의 지정목적 및 외자유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
-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중 관광지 허용규정을 제외한 개정사항을 우선 추진
- 외자유치 차원에서 추진되어온 「레고랜드」에 한하여 허용하되, 「레고」사의 투자의사를 확인후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

貨物트럭 高速道路 通行料 深夜 割引 推進

□ 推進背景

- 심야시간(00:00~06:00)의 고속도로 교통량이 주간시간대에 비해 1/5 수준에 불과한 실정에서, 이용율이 저조한 심야시간에 대형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이용을 유도하여 기존 도로자원의 이용효율성을 높일 필요성 제기

□ 推進經過

- '99.4.2 총리주재 「중소기업인과의 국정좌담회」시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차선제 시행 등 건의
- '99.4.16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화물차량에 대한 야간통행료 감면방안을 건교부에 지시

□ 推進結果

- 2000.1.10부터 10톤이상 대형화물 차량에 대한 심야할인제 시행
 - 대상차량 : 10톤이상 대형화물차
 - 할인시간대 : 0시~6시
 - 할 인 율 : 최대 50%(서울~부산 : 28,600원 → 14,300원)
 - 시행시기 : 2000.1.10~2001년말(한시적으로 시행후 연장여부 검토)

□ 特記事項

- 2000.2월 조사결과 대형화물차량의 심야이용이 45% 증가('99년 7,320대/일→2000년 10,628대/일)하여 연간 188억원의 통행료 할인혜택이 예상됨

産業線 送電線路 昇壓改良 關聯 費用負擔 調整

□ 推進背景

- 산업선전철(중앙선, 태백선, 영동선)의 노후 변전소 설비 개량 추진과 관련, 「한전변전소~철도청 전철변전소」간 송전선로의 승압개량(66→154kV) 필요성 대두
- 그러나 한전소유선로의 시공비용 부담을 둘러싸고 건교부(철도청)와 산자부(한전)간 이견이 제기되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 송전선로 현황 >
 - 한 전 소유 송전선로 10개소(상용8, 예비2, 총연장 92km)
 - 철도청 소유 송전선로 4개소(예비4, 총연장 9km)

□ 爭點事項

- 건교부 및 철도청
 - 산업선은 국가의 기간산업이며, 현재 송전선로의 건설·유지비는 한전에서 부담하므로 한전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비용 부담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관계규정 유추해석시 한전에서 비용 부담하는 것이 타당
- 산자부 및 한국전력
 - 154kV로의 승압은 과도한 설비 투자비 소요로 비경제적이며, 현재의 송전선로의 전력공급 능력에 문제 없으므로 개량 불필요
 - 한전이 승압비용을 부담할 경우, 특정고객의 공급비율을 전 국민에게 전가시키게 되므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 調整經過

- 2000.1.20, 2.27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관계기관 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산업선전철(중앙선, 태백선, 영동선) 구간중 한국전력공사가 소유한 송전선로(한전변전소~철도청 전철변전소)에 대하여 현재 66kV 설비를 154kV로 승압개량 추진함
- 승압개량에 따른 비용부담은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르되, 산업자원부가 이를 해석

☐ 特記事項

- 2000.4.18 산자부 유권해석 결과 철도청에서 승압개량 비용 부담

入札制度 등 建設産業構造 改編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IMF 이후 공사물량은 절반수준으로 격감하였으나, 진입장벽의 완화로 업체수는 급증하여 수주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이 낮아 대부분의 업체가 만점을 받게 되어 있으며, 예정가의 73% 수준에서 응찰해야 낙찰되는 문제점이 있어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됨

□ 爭點事項

- 재경부
 - 적격심사제의 변별력 강화를 통한 낙찰율 상승분만 인정
- 건교부
 - 적격심사제의 변별력을 높이고 적격심사 통과점수를 상향 조정하여 자체적으로 낙찰율 10~12% 인상
 - 2001년부터 최저가 낙찰제 단계적 도입, 감리제도 강화, 하도급 제도개선 등
- 업 계
 -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질서의 부재가 건설산업 위기의 본질이라는 점은 공감하나 현행제도는 유지하고 낙찰율만 88%로 인상

□ 推進經過

- 1999.12.8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개편방안 마련
- 2000.1.18 저가낙찰율 상향조정 등 공사입찰제도 개선방안 마련 지시 (국무총리)
- 2000.1.27 건교부에서 입찰제도를 포함한 건설산업 구조개편 방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개최
- 2000.3. 2 낙찰율 상향조정, 감리제도 강화 및 저가하도급 방지방안 마련등 추가지시(국무총리)
- 2000.3.28 경제장관간담회에서 「공공건설공사 입찰제도 개선방안」 확정·발표

□ 推進結果

- 낙찰하한선 상향 조정
 - 1,000억원~300억원 : (현행) 73% → (조정) 80~83%
 - 300억원~100억원 : (현행) 73% → (조정) 85~88%
- 2001년부터 1천억원이상 PQ공사에 대해 최저가 낙찰제를 단계적으로 도입
-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저가하도급방지, 지방신규업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 방안 등을 마련키로 함

建設業 讓渡讓受에 따른 信認度 承繼與否 調整

□ 推進背景

- 건설공사 입찰에 따른 PQ 및 적격심사기준중 신인도 항목과 관련하여 건설업 등록을 양도양수한 경우 신인도도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이 상이하여 건설업체에서 조정 신청

□ 爭點事項

- 재정부, 조달청 :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양수한 경우 공사실적이 승계된다면 신인도도 승계됨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기준에 명문화
- 행정자치부 : 지자체 발주공사의 경우 관련 개별법령에 승계관련 근거가 없어 신인도 승계 안됨
- 기타의견
 - 건설교통부 : 건설업의 경우에는 신인도가 승계되지 않으나, 감리업의 경우에는 신인도가 승계됨
 - 법 제 처 : 개별법에서 정하는 공법적 지위의 승계와 회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신인도 승계문제는 별개

□ 調整經過

- 2000.5.8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 개최

□ 調整結果

- 건설공사 적격심사시 건설업 양도양수에 따른 신인도의 승계여부는 개별법령에 의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회계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사항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동일하게 건설업 등록을 양도양수한 경우 신인도를 승계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개정키로 함
 - 다만,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신인도 승계관련 규정은 개정·공포 이후에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적용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推進關聯 調整

□ 推進背景

- 논농업직불제 도입필요성에 관하여는 주관부서인 농림부와 예산 관련부서인 기획예산처간에 이견은 없는상태이나, 도입시기 및 여건·추진방법 등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고 있어 조정필요

□ 爭點事項

- 쌀자급을 위한 기반유지 수준의 적정선
- 추곡수매제와 직불제와의 관계정립
- 농업구조개선사업과의 관계
- 기존 시행되고 있는 직불제와의 관계
- 도입시기등

□ 調整經過

- 논농업직불제 도입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99년 12월부터 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
 - 구성 : 공동단장(경제조정관, 농림부 차관보), 관련부처국장 및 학계·전문가 등 7인
 - 회의개최 : 매월 1회 (2000.5.16 제5차회의 개최)
- 논농업 직불제 연구용역 실시(2000.2~5월)
 - 도입의 필요성, 세부도입 방안, 추곡수매제도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실시
 - 구성: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세연구원, 충북대, 서강대 전문가 및 교수

□ 調整結果

- 논농업직불제의 세부시행방안 검토중(6월 확정예정)

採鑛計劃認可時 認可對象面積 關聯 調整

(광업법시행규칙 개정)

□ 推進背景

- 광업부서의 채광계획인가시 산림부서와 일부면적(소면적)에 대해서만 산림형질 변경 협의후認可는鑛區 전체(대면적)에 대해認可해주고 있기 때문에 산림보존 문제가 대두

□ 爭點事項

- 산 림 청 : 광업법상 협의면적 이외에 대해 채광인가를 내주는 현행체계는 국유림 貸付權침해, 현장에서의 업무혼선 초래등 문제발생 소지가 있음. 따라서 법규정대로 협의면적만 인가하도록 시행규칙 개정요망
- 산업자원부 : 현행 시행규칙은 20년동안 시행된 규정으로, 인가 조건에 협의면적 이외에는 타법에 따라 개별 인·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산림법으로 산림보존 및 관리가 충분히 가능

□ 調整經過

- 99.6.14, 9,20,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담당과장 조정회의
- 99.10.1, 10.12 경제조정관 주재 담당국장 조정회의

□ 調整結果

- 채광계획인가를 위한 산림형질변경 협의시 첨부서류의 보완
 - 산림형질변경 허가신청서의 첨부서류에 채광계획인가 지역 (단위광구)전체 측량실측도를 추가함
- 산림형질변경 업무처리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업무지침으로 시달

採石制限距離 에 대한 調整

(산림법시행령 개정)

□ 推進背景

- 채석에 따른 안전지역확보와 경관보호등을 위해 채석허가를 할 수 없는 지역의 확대지정을 추진(산림법시행령 개정)
 - (현행) 지방도 연변 100m이내의 가시지역 제한
 - ⇒ (개정안) 지방도 연변 500m이내의 가시지역 제한
 - ※ 현행의 국도 1km, 고속도로 2km이내 가시지역 제한은 변동없음

□ 爭點事項

- 산업자원부
 - 도로·철도로부터 100m이내 까지만 제한하더라도 경관보존차원에서는 충분함
 - 기존 채석장 및 향후 개발예정지가 도로와 인접하지 않은 지역이 없으므로 사실상 채석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임
- 산림청
 - 도로·철도변 100m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은 산림면적의 2.8%에 불과하며 기존개발업자는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어 기득권을 보호할 예정임
 - 암석발파시 파편의 비산거리는 수평거리 335m임(韓電조사)

□ 調整經過

- 2000.4.14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담당과장 회의 주재

□ 調整結果

- 경관보존과 안전사고방지 차원에서 산림청의 개정령안을 채택하기로 함(제 17회 차관회의에서 원안의결됨)

韓·日 漁業協定 後續措置關聯 調整 (廢業漁船 支援金 支給)

□ 推進背景

- 한·일 어업협정으로 인한 폐업어선 지원 예산이 일반감척 예산 기준으로 편성되어 있어 시·도별로 폐업어선 지원금 규모를 정밀평가한 결과 소요예산보다 1,995억원 부족
- 당초 '99.12월말까지 폐업어선 지원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부족예산의 확보 및 집행방법에 대하여 관련부처간에 이견으로 지원이 지연

□ 爭點事項

- 기획예산처
 - 시·도의 평가결과(어선·어구의 잔존가치 등)에 대하여 객관적 확보 필요
 - 사업대상수(감척대상척수)는 예산에 정해진 사업비 범위내에서 감척대상 척수를 결정하고 지원금은 추후 재산정 지급
- 해양수산부
 - 어민이 직접 신청한 폐업지원대상(척수)과 시·도가 평가한 평가지원 금액은 조정이 어려우므로 확보된 '99 예산을 평가 금액대비 동일 비율로 우선 지급하고 부족예산은 별도 확보 지원

□ 調整經過

- '99.12.28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폐업어선 지원사업은 관련법에 따라 어업인들이 폐업 신청하여 시·도가 감정평가를 마친 어선(693척)을 대상으로 함
- 총 지원금 규모는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가 합의 선정한 회계법인 등 전문 감정기관이 시·도의 감정평가 결과를 재확인후 확정함
- 사업대상 어업인에 대한 지원금 지급은
 - 우선 '99년도 확보 예산(1,555억원) 및 해양수산부의 '99 예산 집행 잔액 전용재원 범위내에서 총지원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 나머지 잔액은 2000년 예산을 확보하여 정산 지급

□ 特記事項

- '99 예산 (1,778억원)을 이월없이 집행('99.12.30)
- 조정결과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기획예산처가 공동 선정한 감정평가기관 및 전문연구기관에서 시·도의 감정평가 결과를 재확인(2000.2)
 - 지원 총규모를 당초보다 185백만원 감액된 금액으로 확정
 - 지원 잔액 정산을 위해 소요경비중 785억원의 예비비 지출(안)을 국무회의(3.28) 상정 의결

海洋開發基本計劃 內容의 部處間 異見 調整

□ 推進背景

- 바다의 이용, 관리, 개발에 관한 국가의 「해양개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조선산업을 동 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하여 관계부처간의 이견

□ 爭點事項

- 산업자원부 : 조선산업을 제조업이므로 해양개발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는 아니됨
- 해양수산부 : 조선산업을 수요산업인 해운과 분리하여 논의하기는 곤란
조선산업을 해양관련 산업이므로 동계획에 포함

□ 調整經過

- 2000.5.1 농수산건설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해양개발 기본계획」은 해양개발기본법에 의거 바다와 관련있는 범부처가 참여, 국가차원에서 수립하는 종합계획이며, 해양 개발에 선박기술개발 등을 필수불가결한 사안이므로
- 조선산업을 포함하여 해양개발기본계획을 수립

□ 特記事項

- 해양수산부는 조정 결과에 따라 「해양개발기본계획(안)」을 수립, 해양개발위원회 및 국무회의 상정 예정(5월중)

□ 社會文化調整官室 □

4大社會保險 管理運營 統合方案 樹立

□ 推進背景

- '98. 2월 제1기 노사정위원회에서 4대 사회보험(국민연금 · 의료 · 산재 · 고용보험)의 보험료 통합징수 방안을 강구기로 합의
- '98. 5월 대통령 주재 제1차 정보화전략회의에서 4대사회보험 통합정보시스템을 강구기로 함

□ 調整經過

- '98. 10월 사회보험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산하에 「4대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단장 : 송자 명지대 총장)을 설치하여 공청회, 관계부처 회의, 시민 · 사회단체 간담회 등 개최
- '99. 12. 29 제4차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관리운영의 단계적 통합방안 마련

□ 調整結果

- 통합범위는 보험료 부과 · 징수, 자격관리, 관련전산망에 한하되, 급여 · 재정통합은 각 보험의 고유목적에 훼손할 우려가 있어 배제함
- 단계별 통합추진 방안
 - 준비단계(2000~2001년) : 서식통일, 전산시스템 설계등 여건조성
 - 제1단계(2002~2003년) : 자격관리 · 징수업무를 2:2 (의료보험 + 국민연금, 산재보험+고용보험)로 기능을 연계하여 통합관리
 - 제2단계(제1단계 성과를 보아 추진시기 결정) : 관리조직 2:2 통합, 가입자 통합관리
- 장기적으로 4대보험간 정보공유체제를 구축하여 자격관리 · 징수업무의 통합관리방안을 강구

公・私年金制度 改善推進

□ 推進背景

- IBRD의 제2차 구조조정차관(SALⅡ) 도입협상에서 우리나라 공・사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

□ 調整經過

- '98. 12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산하에 「공・사연금제도개선실무위원회」(위원장 : 김상균 서울대 교수)를 설치
- '99. 12. 29 사회보장심의위원회 개최, 「공・사연금제도개선 방안」 마련

□ 調整結果

공・사연금제도 개선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3개案의 개선방안 마련

< 기본방향 >

- 연금재정의 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다층구조의 연금체제 구축
- 국민연금과 특수직역 연금의 노후소득 보장기능 연계성 강화
- 특수직역연금의 개선 및 법정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
- 법정퇴직금을 기업연금으로 전환
- 기금운용 조직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건전한 금융시장을 개발 육성

< 개선방안 >

- 제1안 :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제도별 미비점 개선
- 제2안 : 국민연금을 전국민 공통의 연금체제로 개편하고, 특수직역 연금・퇴직금의 역할 재조정
- 제3안 : 국민연금・특수직역연금을 기초연금・소득비례 연금체제로 개편

「社會福祉政策關係長官會議」構成

□ 推進背景

- 2000. 1. 27 대통령 지시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시)
 - 사회복지분야의 부처간 협조를 강화토록 하기 위해 관계장관회의를 상설·운영하는 방안 검토 지시
- 생산적 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경제정책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하여 「사회복지정책 관계장관회의」 구성 추진

□ 調整經過

- 2000. 2. 1 국무조정실장이 「관계장관회의 확대설치 방안」 국무회의 보고
- 2000. 3. 6 「사회복지정책 관계장관회의규정」 (대통령훈령 제88호) 공포

□ 調整結果(構成內容)

< 구 성 > : 총 6명

- 의 장 : 보건복지부 장관
- 위 원 : 환경부·노동부·기획예산처 장관, 여성특별위원회위원장, 대통령비서실 복지노동수석 비서관
 - 상정안건과 관련된 부처의 장(재정경제부, 행정자치부 등)은 회의에 참석 가능

※ 간사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

< 회 의 >

- 정례회의 : 매월 1회 개최
 - 정례회의는 매월 첫째주 수요일 개최
 - 수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의장이 참석범위 조정 가능)

障 碍 人 雇 傭 關 聯 法 單 一 案 關 聯 調 整

□ 推 進 背 景

- 98. 12월 국회 보건복지상임위원회에서 장애인 고용정책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직업재활법(안)을 마련하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중
- 이와 관련, '98. 1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부 소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개정(안)」을 마련하여 법사위에 계류중
- 두 법률은 소관부처, 기금관리, 공단운영 및 장애인고용정책방향 등에 관한 현안이 주요 쟁점이 되어 각 법안을 지지하는 장애인계의 내분으로 비화됨에 따라 조정필요

□ 爭 點 事 項

구 분	노 동 부	보 건 복 지 부
1) 업무분장	·노동부 : 모든 장애인직업재활 업무를 담당 ·복지부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소관업무 관장	·노동부 :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업무를 담당 ·복지부 : 직업상담(지도), 직업능력평가,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취업알선, 취업후 지도 등 모든 직업재활업무 담당
2) 부처간 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계획 포함)	·노동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함
3) 기금운용·배분		
① 기금운용	·노동부장관이 전체기금을 운용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예산안을 공단에 반영함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예에 따라 계정을 분리하고, 양 부처가 별도 운용함
② 분배 비율	·사업주 부담금의 100분의 10 범위내 (70~80억원)	·세입예산의 100분의 50

□ 調整經過

- 99.10.5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1차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단일법안의 기본방향 마련 및 구체적 정책보완방향 제시
 - 보건복지부 · 노동부 · 기획예산처 · 법제처 등 관계부처 및 국무조정실이 함께 Task-Force를 구성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단일법안을 마련기로 함
- '99. 11. 3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2차 관계차관회의 개최
- '99. 11. 25 국무조정실장 주재 제3차 관계차관회의 개최
- '99. 12. 7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 '99. 12. 16 국회 본회의 통과, 2000. 1. 12일 공포됨(2000. 7. 1일 시행)

□ 調整結果

- 법안명칭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과정의 주무부처는 노동부로 하되, 양부처 협조하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 기금운용 및 배분
 - 노동부장관이 전체기금을 운용하되, 보건복지부 사업계획과 예산을 일정비율 범위내에서 반영
- 장애인고용 지원형태의 다양화
 - 장애인의무고용 · 지정고용(현행) 외에도 보호고용 · 지원고용 · 자영업장애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둠

서울 地下鐵의 障礙人 便宜施設 擴充推進

□ 推進背景

- 3. 13 국무총리 지시 (간부회의시)
 - 노인·장애인의 지하철이용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연차별 확대 설치방안 수립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98년 4월 시행)에 의해 주요공공시설은 2000. 4월까지, 철도·지하철 역사는 2005. 4월까지 의무적으로 편의시설 정비추진

□ 調整經過

- 2000. 4. 4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회의개최
 - 보건복지부, 건설교통부, 서울시, 서울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참석
- 국무총리께 보고 완료(4. 10, 간부회의시)

□ 調整結果(年次別 推進計劃)

< 추진방안 >

- 장애인이 모든 지하철 역사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역사별로 최소한 1개 이상의 장애인 승강시설(엘리베이터 또는 휠체어리프트) 설치 확대
 - 환승역 및 혼잡한 역인 63개 역사는 2001년까지 우선 설치
- 장애인 외에 노약자·임산부 등 일반인의 편의시설 이용 활성화 유도를 위한 안내표시 및 홍보 강화
 - W/L를 법상 승강기 범위에 포함시켜 정기적인 정비·보완 추진

< 연차별 설치계획 >

구 분	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이후
E/L	78	32	15	11	20
W/L	100	17	19	19	45
점자블럭	99	29	32	13	25
화 장 실	77	21	12	16	28
사업비(억원)	879	291	268	195	125

冬節期 露宿者 支援對策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전국의 노숙자는 '99.12월 현재 전국 대도시에서 5,400여명 상존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노동부, 서울시 및 관련 민간단체간 협조체제 미비로 노숙자 현황파악, 자활프로그램 수행 및 노숙자 사회복귀 지원 등이 미흡하여 관계기관간에 효과적인 협조체제 구축 및 대책 마련 필요

□ 爭點事項

- IMF이후 경제회복이 되어도 노숙자 수는 단기간내에 감소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련기관이 개별적으로 응급구호적 한시적 보호사업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 노숙자 보호시설 및 의료 지원이 열악하여 노숙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곤란 및 요보호자 방치 결과초래
- 취업관리체제 및 사후관리체제가 미흡하여 노숙자들의 실제 취업효과가 저조하고 상당수가 노숙생활을 재개하는 등 정책의 실효성이 낮음

□ 調整經過

- '99. 12.11~13 동절기 노숙자 지원실태 점검
- '99. 12. 24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일시구호 위주의 단기처방에서 벗어나 노숙자 발생 사전예방, 보호 및 재·자활지원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숙자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노숙자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토록 함

食品安全管理對策 推進

□ 推進背景

- 「수입식품의 안전관리시책 평가」에 대한 국무총리 주재 「정책평가위원회」 합동보고서에서 식품안전관리 관련부처간의 시책조정과 상호보완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부처간의 원활한 협의·조정기능을 수행키위해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를 설치·운영키로 함(99. 6월)

□ 爭點事項(問題點)

- 식품안전관리 업무의 분산, 관련기관간의 유기적 협조 미흡
- 신종 위해물질 등에 대한 대처능력 부족

□ 調整經過

- 1999.12.23 「식품안전관리대책실무협의회(위원장:사회문화조정관)」 개최
- 2000. 3.16 「식품안전관리대책협의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개최

□ 調整結果

- 부처별 부정·불량식품 근절대책 추진과제(9개분야 41개과제)확정
- 부처 합동 「실무대책반」(과장급) 구성·운영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제도(HACCP)” 대책반 : 식약청등 5개부처
 - “유전자재조합식품(GMO)안전관리” 대책반 : 식약청등 5개부처
 - “식품안전종합전산망 구축” 대책반 : 식약청등 6개부처

靑少年 性賣買 防止對策 推進

□ 推進背景

- 최근 우리 사회의 성윤리 의식이 희박해 지면서 청소년 성매매 행위가 확산되는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청소년의 성매매 행위를 예방하고 선도·보호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할 필요성 제기

□ 爭點事項

- 관련부처간 상호협력체계 및 정책조율 기능의 부재
- 청소년 성매매 행위에 대한 예방과 재활대책 미흡
- 가정·학교·사회의 청소년 교육·보호체계 부실

□ 推進經過

- 2000. 2. 10 국무조정실장 주재「청소년보호특별대책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 성매매방지대책안 확정

단속대책	재활대책	예방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체계적 단속체제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점검단’의 상시점검 - ‘지역별 청소년대책협의회’ 중심의 합동단속 ○ 불법영업소에 대한 처벌·세무조사 강화 등 단속 실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보호시설의 설치확대 및 시설에 대한 운영지원 강화 ○ 청소년에 대한 문제해결식 지원강화 ○ 의료지원서비스 강화 ○ 귀가·시설퇴소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 관리체제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보장 강화 ○ 청소년의 취업기회 확대, 근로조건 개선 ○ 학교 성교육 강화 및 대안 학교 설치확대 ○ 건전한 성문화 조성운동 전개

- 「청소년보호특별회의」, 「청소년보호특별대책점검회의」 확대 개편
 - 청소년 성매매 방지대책을 청소년보호특별대책회의의 일환으로 보아 기존의 청소년보호특별대책회의의 구성원을 추가 (15명→18명)
 - ※ 추가위원(3명) : 여성특별위원회 사무처장, 국정홍보처 차장, 국세청 차장
 - 점검회의 주재자 : 대통령비서실 정책2비서관에서 국무조정실 사회문화조정관으로 교체
 - 관련부처 공무원 5명을 위원으로 추가 (11명→16명)
 - ※ 추가위원 : 건설교통부, 기획예산처, 국세청, 여성특별위원회, 국정홍보처 1급 공무원

□ 調整結果

- 각 부처는 소관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차질없이 시행토록 조치
- 청소년보호위원회 중앙점검단은 각 부처의 추진실태를 상시 점검(필요시 국무조정실 주관 정부합동단속 실시)
- 청소년보호특별대책회의 및 청소년보호특별점검회의를 수시 개최하여 각 부처별 추진실적 보고 및 평가

學校給食法施行令 改正推進 調整

□ 推進背景

- 98년이후 IMF의 영향으로 중식지원대상 학생이 크게 증가하여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학교급식법」을 개정 ('99. 8. 31), 결식학생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
 - 학기중 뿐만 아니라 방학기간까지 연 270일 급식지원
 - 필요경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되, 국가가 1/2이상 부담토록 함
- 학교급식법에서 위임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근거마련을 위해 동법시행령 개정 추진중이나 교육부와 행정자치부간에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爭點事項

- 교육부 개정안 : 시·도교육감과 시·도지사가 각각 1/2씩 부담토록 함
 - ※ 2000년의 경우 164천명 지원, 828억원 소요 추정
 - 국가 414억원, 시도교육감 207억원, 시·도지사 207억원 부담
- 행정자치부 : 시·도교육감이 모두 부담할 것을 요구
 - ※ '99정기국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하게 되어 학교급식비 지원은 수용 곤란 (2001년부터 연간 1조5천억원정도 추가부담)

□ 調整經過

- 2000. 1. 18 교육담당과장 주재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개최
- 2000. 1. 25 교육문화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과장급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학교급식법 입법취지와 규정상 자치단체가 전혀 부담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자치단체도 부담토록 함
- 부담비율에 대하여는 재협의 조정기로 함
 - ※ 행자부는 지방비 부담분중 방학기간에 한하여 소요경비의 1/2범위내에서 시·군·구가 부담하고, 나머지(학기중, 방학중 소요경비 1/2이상)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방안 의견제시

□ 特記事項

-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 확대방안으로 2000. 3월부터 결식학생에 대한 중식을 토·공휴일까지 확대 지원기로 함 (현재 270일 → 365일)
 -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실 주관으로 부처간 업무조정 결과 (3. 23)
 - 2000년 : 학기중 및 방학중은 교육청, 토·공휴일은 교육청과 시·군·구청이 분담
 - 2001년 이후 : 학기중은 교육청, 방학·토·공휴일은 교육청과 시·군·구청이 각1/2씩 분담
- 국무조정실, 청와대 조정결과에 따라 교육부가 동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하여 6월중 국무회의 상정 예정

人的資源開發 推進體系 構築

□ 推進背景

- 대통령께서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하여 관련부처간의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교육문화장관회의를 신설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 (1. 27 기획예산처장관 보고시)
- 이와관련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인적 자원개발과 관련된 제반정책을 국가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국민의 지식 축적과 이의 효율적 활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인적자원개발회의」를 신설 추진

□ 爭點事項

- 「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안」에 대해 부처간 의견이 상충
 - △ 설치목적 △ 기능 △ 위원구성 등

□ 調整經過

- 2000. 2. 15 사회문화조정관 주재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
- 2000. 2. 19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설치목적
 - 당초안 : 교육·문화·과학기술·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을 심의·조정
 - 조정안 : 교육·문화·과학기술 등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

○ 기능

- 당초안 : 교육·문화·과학기술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각부처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 조정안 : 교육·문화·과학기술 등의 인적자원 개발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각부처간의 조정을 요하는 사항 및 기타 교육·문화·과학기술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부처간 협의를 요하는 현안사항

○ 수시회의 위원 구성

- 당초안 : 명시 없음
- 조정안 : 교육부장관 등 9명과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부처의장 등으로 구성을 명시 (위원중 행자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국정홍보처장 제외)

□ 特記事項

- 국무조정실 조정결과를 토대로 「인적자원개발회의규정」 (대통령령 제16,735호 2000.2.28)이 제정되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인적자원개발회의」 개최 운영
- 위원장 포함 위원 12명 (위원장 : 교육부 장관)

골프장 施設改善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골프장 부지 면적제한은 자연 지형을 활용한 코스배치 등이 곤란하며, 현행의 클럽하우스 건축 허용면적이 너무 협소하여 입지조건 및 시장기능에 따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자 함

□ 爭點事項

- 문화관광부
 - 18홀기준 108m²로 제한되어 있는 골프장 부지면적 기준 폐지
 - 골프장 클럽하우스 건축면적에 포함되어 있는 그늘집, 기계·전기실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 환경부
 - 골프장 부지면적 제한 폐지 경우 자연환경훼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산림 및 수림지 확보율과 원형보전지 확보율을 각각 40%, 20%에서 50%, 30%로 상향조정
 - 그늘집, 기계·전기실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은 클럽하우스 및 휴게소 면적을 증가시켜 자연환경훼손 우려가 있음

□ 調整經過

- '99. 8. 19 교육문화심의관 주재 관계부처 조정회의 개최

□ 調整結果

- 부지 면적제한 폐지는 유보하고 그늘집, 기계·전기실을 클럽하우스 건축면적에서 제외하여 클럽하우스 면적기준 완화
- 2000. 1. 25 국무회의 의결 후 2000. 1. 28 시행

PC방의 健全化 및 環境改善 對策

□ 推進背景

- PC방이 증가하면서 문화산업의 인프라로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으며, 현재는 이용자에게 주로 게임을 제공하고 있으나, 지역문화 공간으로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불법행위 단속과 병행하여 제도적인 미비점 보완을 위해 관계법령 개정 추진

□ 推進經過

- 2000. 4월 : PC방 개선대책과 관련하여 추진방향 제시·조정

□ 推進內容

- PC방을 이용대상자에 따라 청소년전용, 일반,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청소년전용PC방에는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 경찰청, 지자체 등 유관기관 협조로 청소년대상 심야영업행위 단속 강화
- PC방의 실내환경 개선
 - 청소년전용 PC방의 경우 흡연금지
 - 실내조명기준(40룩스) 준수 여부 점검 강화
 - 소방시설·소음방지시설은 업소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필요한 시설을 갖추도록 하되, 소화기·헤드폰 등 최소한의 시설은 설치 의무화
- 업소 자율정화기능 강화
 - 실내환경, 음란물 차단프로그램 설치 등 우수업소에 대해 모범업소를 지정, 융자 등 지원 (모범업소 인증제)
 - 관련단체의 자율 정화활동을 강화토록 지원하기 위한 지도·단속증 발급 제도 도입

□ 推進結果

- 2000. 4. 4 공청회 개최하여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개정안 마련, 입법예고 중 (5.9 ~ 5.29)

青少年保護特別對策 推進

□ 推進背景

- 화성 청소년수련원 화재, 인천호프집 화재, 원조교제 등 잇따른 청소년관련 사건·사고를 감안하여 연말연시를 전후해서 청소년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대처할 필요성 제기

□ 部處別 推進事項

- 행정자치부 :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점검 등
- 교 육 부 : 교외 학생 생활지도 강화, 인성교육강화 대책 추진 등
- 문화관광부 : 청소년 문화예술·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확충 등
- 보건복지부 : 식품접객·공중위생업소 청소년보호 위반 행위 벌칙 강화
- 노 동 부 : 청소년 유해업소 알선행위 금지대책 추진

□ 推進經過

- '99.11.24 :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청소년보호특별대책(안) 마련
- '99.12. 4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여 청소년보호특별대책 확정
- '99.12. 7 : 청소년보호특별대책 국무회의 보고

□ 推進結果

- 청소년보호특별대책 추진방침 시달 (국무총리지시 99-30) : '99. 12. 7
 - 중앙부처 및 시·도 추진전담반 구성, 세부추진계획 수립·추진
 - 법령 제·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보완·조치
 - 지방자치단체 및 검·경찰은 집중적인 단속 실시

失業・福祉 電算網 連繫센터 運營主體 調整

□ 推進背景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2000. 10월 예정)과 관련 실업·복지·소득·재산 등 관련정보망의 연계를 추진시, 관련 전산망의 연계센터의 구축 및 운영주체 선정과 관련하여 정보통신부와 행정자치부간에 이견

□ 爭點事項

- 정보통신부 : 관련 전산망의 연계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전산원이 연계센터의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
- 행정자치부 : 국민 개인정보의 보호문제, 중복투자방지 등을 위해 행정자치부 산하 정부전산정보관리소가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

□ 調整經過

- 2000. 4. 11 실업대책기획평가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 2000. 4. 19 실업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개최
- 2000. 5. 6 실업대책기획평가단장 주재 관계부처 회의

□ 調整結果

- 실업·복지전산망의 관련자료를 가장 많이 생산·활용하는 주체는 시군구이므로 행정자치부의 정부전산정보관리소를 연계센터의 운영주체로 확정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부처가 협조토록 조정

日傭勤勞者 保護對策 推進

□ 推進背景

-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으로 근로자 중에서 일용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불구하고, 전직이 잦은 일용근로자의 특성으로 인해 고용관리가 어려워 이들에 대한 보호대책 마련 필요

□ 爭點事項

- 일용근로자에 대한 고용관리체계 미비로 인해 고용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일거리 감소시 생계지원대책 마련, 일용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 강화 필요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의 가입대상 범위가 작아 수혜근로자가 적음

□ 調整經過

- '99. 11. 5 실업대책자문회의 개최
- '99. 12. 8 실업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개최

□ 調整結果

- 「2000년 종합실업대책」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조정
 -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피보험 관리체계를 연구·마련하고,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
 - 일거리 감소로 인한 일용근로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동절기 일용직 공공근로사업, 동절기 능력개발훈련을 실시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의무가입대상공사 확대(공공건설공사 100억원 이상 → 50억이상) 추진 등

公共勤勞事業 參與者의 雇傭保險 適用問題 調整

□ 推進背景

- 국가 및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실직자에 대해 2000년부터 고용보험제도를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하여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조정 필요성 대두

□ 爭點事項

- 노동부·재경부 : 공공근로 참여자도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제도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
- 예산처·행자부 :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국가가 응급대책으로 시행하는 것이며, 공공근로사업으로의 안주우려 등 도덕적 해이문제, 공공근로 참여경력만으로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 미형성 등을 이유로 적용에 반대

□ 調整經過

- '99. 12. 9 실업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개최

□ 調整結果

- 공공근로사업의 특수성과 고용보험 적용에 대한 공감대 미성숙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은 적용치 않기로 조정

□ 特記事項

- 고용보험법시행령(2000. 2. 29개정)에 반영

公共勤勞事業 民間委託 活性化 推進

□ 推進背景

- 민간단체를 공공근로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함으로써 수요자의 입장을 폭넓게 반영하고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경험 등을 활용하여 사업효과 제고를 도모할 필요

□ 爭點事項

- 민간위탁업무 추진관련 지도감독, 확인점검, 예산집행상황 확인 등으로 민간위탁을 기피
- 지자체에 따라 민간위탁 규모의 상한선인 지나치게 낮아 사업의 효율성 및 다각화에 제약
- 공공근로사업의 단계별 예산배정 및 추진에 따라 관련절차가 번잡하고 사업의 연속성 유지 곤란

□ 調整經過

- '99. 11. 12 실업대책실무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개최

□ 調整結果

- 민간단체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 각종 보고를 최소화하여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간섭을 억제
- 단계별 사업추진 및 예산배정에 따른 문제점 해소를 위해 동일 사업의 최대 추진기간을 1년 미만의 기간까지 허용
- 민간단체·위탁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단체별 사업예산의 10% 범위내에서 위탁, 추진토록 되어 있던 것을 예산의 10%이상 위탁 추진을 권장

□ 特記事項

- 조정결과에 따라 「2000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행자부)에 반영

政府支援인턴제 事業關聯 調整

□ 推進背景

- 고졸·대졸의 고학력미취업자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취업능력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부지원인턴제를 추진
※ 1999. 12월 42천명, 2000. 4월 12천명 투입
- 투입시기, 지역별 투입인원, 일부 사후관리 미비로 사업효과가 감소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

□ 爭點事項

- 지역별 인턴채용 목표인원과 인턴인력수급 상황이 불일치
- 인턴의 집중투입시기와 대기업의 신입사원 선발시기가 중복되어 시행효과 반감
- 인턴신청후 선발되지 않은자, 선발된 후 중도퇴사자등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 調整經過

- 2000. 2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대학 등 시행기관과 인턴고용사업장을 현장점검
- 2000. 3. 8 실업대책실무위원회에 점검결과를 보고
- 2000. 4월 노동부의 인턴사원 지원사업 추가실시시 조정결과 반영

□ 調整結果

- 지역별로 인턴투입인원을 결정할때에 지역별 실업율, 인턴수요가 많은 중소기업의 현황, 인턴에 대한 구인·구직 수요 등을 반영
- 향후 인턴사업 추진시 대기업의 신입사원 선발시기등 노동시장 상황을 적극 고려
- 인턴신청후 미선발된 자, 중도퇴사자등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소개 등 Work-Net을 통한 사후관리 강화

海外就業 推進事業 調整

□ 推進背景

- 국내실업인력의 해외취업을 지원하는 해외취업사업과 관련, 구직등록 및 인력선발은 산업인력공단, 해외구인개척 및 출국지원은 국제협력단이 각각 분산하여 담당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부진하고 지원자에도 불편을 초래
- 해외취업사업의 활성화와 지원자에 대한 효율적 원조를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

□ 爭點事項

- 해외취업사업 추진체계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
- 해외취업지원자의 어학, 경력 등이 해외기업의 구인조건에 미달

□ 調整經過

- 99. 8 산업인력공단, 국제협력단 등 시행기관 점검
- 관계부처 간담회('99. 10. 19)등을 통해 추진체계 일원화 등 개선방안 도출
- 2000. 1월이후 추진체계 일원화에 따른 예산이체등 후속조치 수시독려

□ 調整結果

- 해외취업사업 추진체계를 노동부산하 산업인력공단으로 일원화
 - 금년사업은 산업인력공단이 단독으로 추진하되, 일원화에 따른 예산이체등 후속조치는 현재 외교통상부, 노동부간 협의중
- 산업인력공단의 교육과정에 해외취업 예정자에 대한 어학 및 직무능력훈련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

公共勤勞DB構築事業 推進方向 調整

□ 推進背景

- 공공근로사업 선발관리, 중복수혜배제 및 통계관리등 실업자의 체계적 관리와 공공근로관련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공근로DB」 구축을 추진
 - 2000년도 공공근로 사업지침에 의거 제1단계 사업부터 동시스템을 통해 조회토록 규정

□ 爭點事項

- 행 자 부 : 공공근로 DB구축사업은 고용보험 수혜여부, 생보자 및 고용촉진훈련여부 확인 등으로 제한하여 활용
- 노 동 부 : 공공근로사업 선발관리를 위해 공공근로사업의 선발·투입 등 모든 관련사항을 입력하여 관리
- 자치단체 : 현 공공근로DB프로그램이 통계관리, 선발·대기자 명부관리 및 적격자 여부 검색등에서 일부 기능미비로 활용에 어려움

□ 調整經過

- 2000. 2. 14 실업대책기획평가단 주관으로 관계부처 조정회의 (행정자치부, 노동부, 경기도, 부산시, 중앙고용정보관리소)

□ 調整結果

- 행자부는 DB시스템은 현행체제로 운영하되 개선사항은 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종합하여 노동부에 개선협조(2000. 3. 6)
- 노동부는 행자부 및 자치단체의 개선요구사항을 검토하여 사용자 위주의 운영체계를 마련·시행하고, 그 결과를 실업대책실무위원회에 보고(2000. 5월말 시스템개선 완료 예정)

國民年金길라잡이事業 推進方向 調整

□ 推進背景

- 국민연금의 확대시행('99.4월)에 따른 대국민홍보를 위해 공공근로요원을 활용하고 있으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시행상의 문제점을 다소 개선할 필요
 - 공공근로요원을 국민연금홍보요원(길라잡이)으로 1일평균 8,800명 투입('99. 3. 15~'99. 12. 31)

□ 爭點事項

- 국민연금 적용대상자 상당수가 소득과약 곤란 및 생활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보험료납부 관리대상에서 제외
 - ※ 총적용대상 1,086만명중 557만명이 납부예외자로 관리
- 홍보요원(길라잡이)이 대상자 신고, 보험료 조정, 보험료 납부독려 등을 수행함을 감안할 때 우수인력(고학력 유경험자)이 필요

□ 調整經過

- '99. 12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길라잡이 활용실태를 점검
- 2000. 1 점검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개선방안 협의

□ 調整結果

- 우수인력확보를 위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홍보요원을 직접 선발·모집토록 권고
- 인력부족에 대처 공공근로 인력을 납부예외자 및 미신고자 해소를 위한 홍보요원(길라잡이)으로 활용

中食支援事業 推進方向 調整

□ 推進背景

- 빈곤가정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과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중식지원사업의 “토·공휴일까지 확대(2000.4.1)”를 계기로 사업추진체계, 급식방법 등을 재조정할 필요성 대두
 - 그간 중식지원사업은 교육부가 학기중 180일, 방학중 90일에 대해 실시(국고 50%, 나머지는 지방비)

□ 爭點事項

- 예산확보와 관련하여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지방비 부담분(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간 비율)에 대한 규정신설이 추진중이나, 부담비율에 대해 관련부처간 의견이 상이(교육부는 자치단체도 부담, 행자부는 시·도교육청이 전액부담)
- 급식방법과 관련하여, 토·공휴일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법을 강구중이나 방학기간중의 지원행태(쌀 등 현물지원, 농산물 교환권 지급 등)를 답습할 우려

□ 調整經過

- 2000. 3 시·도교육청, 자치단체, 학교 등을 실태점검
- 2000. 4 점검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 업무조정

□ 調整結果

-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국가부담 제외분에 대한 경비분담 방법(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간 부담비율)을 명확히 하도록 독려
- 토·공휴일 중식지원 방법과 관련해서는 시·도교육청이 자치단체와 협조,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급식방법 모형을 개발·보급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토록 권고

□ 規制改革調整官室 □

靑少年保護年齡 適用基準 調整

□ 推進背景

- 「靑少年보호법」에 따라 靑少年에 대한 술·담배 판매, 靑少年 유해업소 고용·출입 등을 단속함에 있어, 상당히 많은 수의 대학생(특히 1학년), 직장인, 군인들이 사회통념상 성인으로 간주됨에도 주민등록상 만19세 미만에 해당되어 단속대상이 됨에 따라, 단속과정에 마찰 초래
- 이와 관련, 대학생·대학주변 음식점업주 등 이해관계인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靑少年보호연령 적용에 문제를 제기함에 따라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爭點事項

- 靑少年보호법상 보호연령 기준의 현실성이 낮고 규제준수 가능성이 높지 않음
- 현행 법령상 각 개별법에서 靑少年보호연령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음

법 률 명	소관부처	연 령 기 준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경 찰 청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靑少年보호법 인용, 만19세미만 " "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경 찰 청	- 별도규정 - 만19세미만
영화진흥법	문화관광부	- 별도규정 - 만18세미만. 단, 고등학생은 제외
공 연 법	문화관광부	- 별도규정 - 만18세미만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문화관광부	"

□ 調整經過

- 2000.3.17 규제개혁위원회 행정사회분과위원회 상정·의결
- 2000.3.24 규제개혁위원회 상정·의결

□ 調整結果

-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보호연령 기준인 “19세미만”의 적용에 있어서,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경과여부를 기준으로 하였으나,
- “19세”에 도달하는 당해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기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의결

□ 向後 推進計劃

-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연내입법 추진
 - * 고교졸업을 앞둔 1,2월중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고교3학년생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협조, 학생 생활지도 강화

□ 特記事項

- 영화진흥법, 공연법,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등 타 법률의 청소년보호연령 기준도 청소년보호법과 통일하여 법률 개정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권고

人蔘製品의 管理體系 調整

□ 推進背景

- 인삼가공 재료에 따라 동일업체에 대해 「인삼산업법」(원형삼)과 「식품위생법(인삼부산물)」으로 중복관리 되므로 이에 대한 관리체계개선 필요
- 구체적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식약청과 농림부간에 이견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됨

□ 爭點事項

- 복지부·식약청 : 식품의 업종분류는 인삼의 유효성분으로 결정하여 「식품위생법」으로 관리
- 농림부 : 이원적관리가 불합리하므로 「인삼산업법」으로 관리

□ 調整經過

- 99.11. 26 제40회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에서 개선안 의결
- 2000. 3. 31 제48회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에서 후속조치 보고

□ 調整結果

- 인삼을 주원료로 한 인삼제품(농축인삼류, 인삼분말류, 농축홍삼류,홍삼분말류 및 인삼함량 80%이상 제품)을 생산할 경우 「인삼산업법」에 신고 및 관리를 「식품위생법」에 의한 것으로 간주

□ 特記事項

- 조정결과에 따라 농림부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인삼산업법 개정안 입법예고(2000. 6월 예정)

養殖漁業 生産性 向上對策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양식어업에 따른 환경오염방지를 위해 양식어장에 침전조(또는 동등시설)를 설치토록 하고, 자연환경지구내의 육상양식시설 및 종묘생산시설에 대하여 최소한의 시설만을 허용하고, 관리사를 부대시설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어민들의 부담이 많아 해양부에서 개선을 요구 하였으나, 환경훼손을 우려한 환경부측에서 규제완화에 반대

□ 爭點事項

- 해양부 : 거름망 시설을 침전조동등시설로서 인정하고, 부대시설의 범주에 관리사를 포함토록 함
- 환경부 : 거름망시설의 효율이 인정되지 않은 상황이며, 관리사를 부대시설에 포함시킬 경우 편법적인 이용 가능성 및 타시설 입지허용에 대한 반대명분이 없음

□ 調整經過

- '99. 9. 17, 10. 5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관계부처 국장급 참석)
- '99. 10. 29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의결

□ 調整結果

- 침전조동등시설로서 거름망 시설 인정, 관리사의 시설기준 및 설치지역을 엄격히 제한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리사 설치 허용

小型漁船의 出入港 申告制度 改善

□ 推進背景

- 현행 어선의 출입항신고는 직접 신고소에 가서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나, 당일 귀항하는 어선의 경우 출항시마다 신고하는 데에 따른 불편이 과다하고 대항신고소의 경우 민간인(어촌계장, 이장)이 신고소장을 겸하고 있어 상시신고가 어려움
- 어민불편이 많아 신고방법등의 개선이 필요하나 해양부, 국방부, 해경 등 관계부처간 이견으로 출입항 신고제도 개선에 어려움

□ 爭點事項

- 2톤미만 소형선박에 대해서 출입항 신고방법을 현행 대면서면신고에서 전화신고가 가능토록 신고제도를 개선하는데 대해
 - 국방부 : 적·불순분자 침투, 밀입국 환승등 해상침투 예방 및 색출곤란등 현재의 군사·안보여건상 수용불가
 - 해경청 : 안보, 치안여건 및 해상사고시 구조곤란등으로 수용불가능
 - 해양부 및 시·도 : 신고제도 개선 찬성

□ 調整經過

- 2000. 1. 18, 규제개혁위원회 경제2분과위원회
(관계부처 국장급 참석)
- 2000. 1. 28,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의결

□ 調整結果

- 2톤미만 소형어선의 출입항 신고방법을 대항신고소가 있는 항포구 등에 대하여는 전화신고 등도 가능토록 함
- 어선 등의 출입항 제한시간을 지자체 및 관할군부대 등이 협의하여 해상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 水質改善企劃團 □

새만금 干拓事業 環境影響共同調査團 構成・運營

□ 推進背景

- '96년 시화호 오염이 사회문제화된 이후 새만금호 수질오염 가능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증대
 - 새만금 상류하천인 만경강의 수질이 농업용수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상류하천 수질개선 및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이 필요
- '98하반기부터 해양환경 및 수질오염, 갯벌생태계 파괴 등 새만금사업의 환경영향 및 경제성에 대한 문제점 본격 제기
 - 환경단체에서 새만금사업 전면중단 또는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민·관 공동조사 제안
 - 전라북도에서 민·관공동조사 건의 ('99. 1. 14)

□ 推進經過

-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주관으로 수차례의 관계부처회의(4회)와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위원장: 박원훈)(2회)를 거쳐 새만금 환경영향 공동조사 계획을 확정('99. 4. 22)하고 공동조사단을 구성·운영

□ 共同調査團 構成 및 運營

- 기본 목표
 - 새만금 사업의 환경영향, 경제성,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등 타당성을 과학적·객관적인 방법으로 조사·연구·평가하고 필요한 대책을 정부에 건의

○ 조사단 구성 : 30명

- 민간전문가 : 21명 (정부, 전라북도, 환경단체에서 추천)
- 정부·관계기관 : 9명
- 조사단장 : 이 상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 경제성(10명), 환경영향(9), 수질보전(10) 등 3개 분과조사단으로 구성

○ 조사 기간 : 1999. 5~2000. 6.15

○ 조사단에서 수립한 조사연구계획에 따라 조사연구를 진행중

- 2000.5월말까지 공동조사단 전체회의 9회, 분과회의 27회를 개최하여 조사 진행상황 점검

□ 向後計劃

- 공동조사단에서 조사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정부에 건의하면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

統合淨水場 費用負擔方案 調整

□ 推進背景

- 국가부담으로 건설중이던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건설비의 부담주체를 '94년부터 지자체부담으로 전환
- 이후, 행정자치부 및 지자체에서 통합정수장 건설비의 부담주체를 환원(지자체→국가)토록 요구 지속
 - 98년 및 '99년에 의원입법으로 수도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광역상수도 재원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로 폐기 의결
 - 현재 국회에 지자체의 청원 다수 계류중이며, 청원시 시민단체등의 헌법소원 제기중

□ 爭點事項

- 환경부 : 기획단 조정방향에 원칙적으로 찬성
 - 행자부 :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곤란
 - 지자체 설득을 위해 국가(수공)부담으로 환원필요
 - 건교부 : 요금감면은 정책적으로 추진시 제한적으로 검토
 - 재정부 : 지자체가 부담함이 타당하며,상환기간 연장곤란
- ⇒ 현재로서는 행자부에서 교부세와 관련,전향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문제해결이 가능

□ 調整方向

- 수도사업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간 기능분담의 기본원칙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지방비로 추진함이 바람직
 - 수도사업에 대한 국가기능은 수자원개발 및 광역상수도를 통한 원수 공급업무로 한정 필요
- 다만, 지자체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통합정수장 건설비를 부담한 시.군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방안마련 필요
 - 상수도부문 보통교부세 산정기준 개선
 - 광역상수도요금중 통합정수장설비요금분 감면
 - 재특용자금 상환기간 연장(5년거치 10년상환→5년거치 15년상환 또는 10년거치 10년상환)

□ 調整經過

- 99. 2. 5 : 전주,밀양등 20개 지자체장 관계기관 방문
- 99. 5. 6 : 관계기관 실무회의 개최
- 99. 8. 26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추후 재논의기로 결정)
- 2000 .5 : 기획단조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수렴중

□ 向後 推進計劃

- 각 부처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 모색토록 유도
- 각 부처, 지자체, 국회동향 및 헌법소원결과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계부처 조정회의 재개최 검토

下水道事業費 財源調達 및 支援體系 調整

□ 推進背景

- 하수도사업의 재원부족
 - 지방양여금을 주요재원으로 하수처리장, 하수관거등 하수도사업을 추진중이나, 양여금세입감소로 재원부족 예상
 - ※ 2000년부터 보통교부세 지원중단으로 재원부족규모 증가예상
- 국고지원재원의 다양 및 복잡
 - 하수도사업에 지방양여금, 환특보조·융자, 공공자금융자, 보통교부세 등 5개 재원 지원중이나
 - 국고재원간 지원체계가 상이하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재원간 이동이 경직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 애로

□ 爭點事項

<부족재원 확충문제>

- 환경부 : 하수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각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필요
- 행자부 : 하수도사업에 대한 추가적인 양여금지원은 원칙적으로 곤란하나, 정책적으로 추진시 검토
- 재정부, 예산처 : 지방양여금 또는 보통교부세의 재원조정을 통해 해결함이 바람직

<예산지원체계 개선문제>

- 환경부 : 수질부문을 양여금에서 환특으로 이관(안정적
재원 확보위해 주세등 기존세입을 환특법에서 규정)
- 행자부 : 현행 재원내에서 환특으로 이관하는데에 이의없음
- 재경부 : 양여금재원을 환특으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정책적으로 추진시 수용의사
- 예산처 : 현행과 같이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

□ 調整方向

<부족재원 조달방안> : 11,709억원

- 부처간 공동부담의 원칙에 따라 다각적인 조달방안 강구
 - 지방양여금 세입증가전망 상향조정
 - ※ 주세, 전화세 5% → 주세 7%, 전화세 11%
 - 팔당특별대책상 재원조달방안 조기적용(2003→2001)
 - ※ 팔당특별대책상 수질부문 양여금 배분율
 - 2000년 24.5%→2001년 26.5%→2002년 28.5%→2003년 30%
 - 기타 부족재원은 민자유치등을 통해 환경부 자체조달

<예산지원체계 개선방안>

- 수질부문 지방양여금을 현행 지방양여금에서 환경개선특별
회계로 이관하여 국고재원 통합관리
 - 주세 및 전화세는 국세와지방세의조정에관한법률을
개정하여 수질부문 해당분만큼 환특회계로 전입
 - 농특세는 한시재원이므로 현행과 같이 지방양여금으로 추진

□ 調整經過

- 98. 4 : 국무총리지시 시달(하수도사업 개선방안 마련)
- 99. 10 : 환경부 개선방안 제출
- 99. 12.17, 12.20, 2000.1.26
: 부단장 주재 관계부처 실무회의 3회 개최
- 99.12.23, 2000.2.10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2000. 5 : 관계부처별로 개선방안 검토중

□ 向後 推進計劃

- 효율적인 이견조정을 위한 재원조달방안과 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별개안건으로 분리하여 조정 추진
- 재원조달방안은 현재 수립중인 금강·영산강수계물관리 종합대책과 연계추진
 -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관계부처와 충분한 사전협의토록 하되, 부득이할 경우 기획단에서 협의조정
- 지원체계 개선방안은 기획예산처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방향 및 세부내용 검토조정

물管理情報化 推進方向 調整

□ 推進背景

- 「물관리종합대책('96~2011)」에 따라 부처공동으로 「물관리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추진기로 결정
- 기본계획 수립 관련 물관리정보화 추진방향 및 주요 내용에 대해 기관간 이견
 - 물관리정보화 중계DB구축 필요성 및 전담기관
 - 수량·수질통합시스템 구축필요성 및 전담기관
 - 기관간 물관리정보통신망 구축방향
 - 기초조사 관련 역할분담체계

□ 爭點事項

- 행정자치부
 - 행자부에서 물관리정보중계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수량·수질을 통합한 통합중계DB 구축
 - 기관간 정보통신망은 행자부의 국가지방행정망 이용
- 건설교통부
 - 행자부의 중계시스템은 기관간 물관리정보의 중계기능만 수행하고, 통합DB의 구축은 건교부가 담당
 - 부처별 개별정보화를 원칙으로 하되 건교부에서 상위통합 시스템 구축
 - 물관리기초조사는 각 부처별 업무소관에 따라 각각 추진

- 환경부
 - 수질모델링을 위해 소하천의 유량조사자료 필요시 환경부에서 독자적인 조사추진 필요
- 정보통신부
 - 물관리정보중계시스템은 불필요하며, 기관간 정보통신망은 초고속국가망을 이용함이 바람직

□ 調整經過

- '98. 1 ~ '99. 4 : 부처실무회의 7회 개최
- '99. 5. 7 : 민간전문가 간담회 개최
- '99. 6. 21 : 물관리정보화기본계획(안)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
- '99. 12. 22 :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위원장:박원훈) 회의 보고
- '99. 12. 30 :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국무총리) 개최 및 「물관리정보화 기본계획」 확정

□ 調整結果

- 행자부의 중계시스템은 물관리정보의 중계기능만 담당
- 건교부와 환경부가 각각 수량, 수질에 대해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건교부에 Clearing House 구축
 - 각 기관은 소관업무에 대해 정보시스템 구축 및 기초조사 추진
- 중앙부처간 정보통신은 행자부의 중계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기타 통신망은 부처별로 자체구축

□ 向後 推進計劃

- 협의·확정된 물관리정보화기본계획에 따라 각 부처·기관별로 물관리정보화사업 추진(1997년 ~ 2011년)

洛東江水系 물管理綜合對策 調整

□ 推進背景

- 93년부터 낙동강수질개선을 위한 대책을 추진하였으나 수질 개선대책만으로는 낙동강 하류의 II급수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99.1.28 국무총리 지시에 의거, 수질개선대책과 수자원확보대책을 함께 추진하는 범정부차원의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추진
- 『낙동강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주요과제인 갈수조정댐 건설, 취수원다변화, 오염총량관리제 도입 등에 대하여 관계 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의 이견으로 이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됨

□ 爭點事項

< 갈수조정댐 건설 >

- 대책(안) : 갈수기의 하천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갈수조정댐 건설. 댐 위치는 지역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2000년 상반기중 결정
 - 경 남
 - 댐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및 추가규제 우려
 - 기존댐 운영방식 변경, 지하수개발, 산림녹화, 수요관리 등으로 갈수조정댐 기능확보 가능
 - 경 북 : 댐건설에 따른 추가규제 우려

< 취수원 다변화 >

- 대책(안) : 부산·경남지역에 청정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건설. 취수원은 현지 정밀조사를 거쳐 2000년 상반기중 결정
- 경 남 : 황강 및 남강수계를 부산지역 광역상수도 취수원으로 이용하는 것에 반대
- 부 산 : 취수원 다변화 반드시 필요

< 오염총량관리제 >

- 대책(안) : 2002년 광역자치단체부터 시(2003년), 군(2004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연평균 BOD 1등급 유지 자치단체는 시행유보.(대구는 2001년 상반기부터 시행) 오염총량관리항목은 BOD부터 시작하여 장기적으로 COD, T-N, T-P로 확대
- 강원·경북 : 지역개발이 불가능해지므로 반대
(BOD 2ppm 지역까지 면제 요구)
- 대구 : 타 광역지자체와 같이 2002년 실시
- 부산·경남 : BOD외에 COD, T-N, T-P도 관리항목 추가

< 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 >

- 대책(안) : 낙동강수계 전체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하되, 산업단지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24시간 자동감시장치 설치. 기존 배출공장은 연차적으로 산업단지내로 이전 유도

- 경 남 : 개별입지뿐만아니라 산업단지내에도 신규입지를
금지하고 기존공장은 연안지역으로 이전
- 부 산 : 대책(안) 수용곤란. 별도 관리대책 수립 요구
- 대 구 : 당초 대책안대로 시행

< 물이용부담금제 >

- 대책(안) : 낙동강수계 전역에 대해 물이용부담금 부과하되,
댐 건설지역은 물이용부담금 면제 추진.
톤당요율 등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대구,경남·북 : 차등요율적용
- 부 산 : 전지역 공동부담 필요
- 울 산 : 공업용수 부과제외

□ 調整經過

- 99. 11. 8, 국무조정실장 주재 낙동강수계 시·도지사 간담회 개최
- 99. 12.20, 부단장 주재 관계부처 국장 조정회의 개최
- 99. 12.23,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調整結果

< 갈수조정댐 건설 >

- 지역전문가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갈수기 유지용수
증대방안을 조사 후 댐건설이 필요할 경우 해당 지역과
협의하여 위치, 규모 등 구체적인 사항을 결정

< 취수원 다변화 >

- 지역전문가 등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강변여과수, 생물전처리 공법 등에 대한 조사를 우선 실시하고, 기타 청정수원 등을 취수원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취수위치, 취수량 등에 대해 검토

< 오염총량제도 도입 >

- 대책안대로 시행하되, 대구광역시는 다른 광역지자체와 같이 2002년 시행, 도시지역은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 BOD부터 시작하여 COD, T-N, T-P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되 관리항목 추가를 위한 조사연구팀을 구성·운영

< 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리강화 >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개별업체와 공단 지역등에 대한 별도의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수립

< 물이용부담금제 >

- 낙동강수계 전역에 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부과(댐 소재지역 제외)
- 부과금액, 면제지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낙동강수계관리 위원회에서 결정

□ 其他 特記事項

- 조정한 대로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 확정 및 차질없는 추진 지시(99.12.30)
- 대책추진에 따른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가칭) “낙동강수계 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정 추진중(금년 6월에 법안 국회제출 예정)

環境技術開發및支援에 관한法律 改定 關聯 調整

□ 推進背景

-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개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환경부와 산업자원부의 이견에 따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4차례의 조정회의를 개최하여 조정

□ 爭點事項

○ 환경부(법제처)

-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의 핵심인 인증기관의 지정 및 감독은 환경부에서 수행하고
- 인증심사원은 자격기준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한 자는 인증심사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며, 심사원의 적정여부는 인증기관 관리감독시 확인
- 인증기관 지정권한외에 교육 등 인증과 관련된 업무는 전문기관에 위임

○ 산업자원부

- ISO14001(EMS)의 경우 인증기관, 심사원연수기관, 심사원 자격인증기관 등의 지정·감독 권한을 민간기관(품질환경 인정협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므로

- 환경성적표지인증제도도 동일하게 운영

△ 각 기관별 지정, 취소, 벌칙, 감독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

△ 모든 권한을 품질환경인증협회로 위탁하여 협회 활성화 도모

□ 調整經過

○ '98. 5.~ 6 : 입법예고 (환경부)

○ '98. 10.1, 10.20, 11.21 : 부단장 주재 3차례 조정회의 개최
- 외교통상부, 환경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과학기술처, 농림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관계관, 법제처 환경담당법제관 참석

○ '98. 12. 3 : 조정회의결과 통보(국무조정실)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 관련사항>

- 환경정책의 주무부서인 환경부에서 현행 환경마크제도와
연계 추진

- 인증기준, 인증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관장하되 산업자원부장관과 사전 협의

· 다만, 산자부의 생산성본부인증원 등 환경경영체제 인증
기관은 동제도의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함

· 인증기관을 지정, 관리하는 기관의 설치여부는 환경부
장관이 ISO 환경라벨링 국제표준화 완성추이 및 국제동향,
인정기관지정 필요성 등을 정밀·종합검토하여 결정하되,
별도의 인정기관을 지정할 필요성이 있을경우에는
한국품질환경인증협회를 동제도의 인정기관으로
지정·관리하도록 함

- '99. 1 ~ 8 : 관계부처협의 및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심의
- '99. 8. 19 : 차관회의 상정
 - 산자부 이견제기로 심의 보류
- '99. 9. 22 : 미합의 쟁점사항에 대한 조정요청(환경부)
- '99. 10. 5 : 사업지원부장 주재 조정회의 개최
 - 환경부, 산업자원부, 법제처 담당관 참석
- '99. 10. 6 : 조정회의결과 통보 (국무조정실)
- '99. 10. 22 : 국무회의 의결
- '99. 10. 29 : 관련법안 국회제출

□ 調整結果

- 환경성적표지 인증제도와 관련하여
 -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인증기관 지정시에도 환경부장관이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
 - 단, ISO14025가 국제표준화(ISO스탠다드)에 의해 시행될 경우 이법에 의한 환경성적표지제도는 폐지
 - 심사원 교육업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위임및위탁에 관한 조항에 관련문구 추가

京釜高速鐵道 環境影響評價 騒音基準 調整

□ 推進背景

- '92년 6월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간의 경부고속철도 소음기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 고속철도의 차종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운행시 소음기준을 일본의 신간선 기준인 “최고소음도”를 적용기로 합의
 - 주거지역 70db, 상·공업지역 75db
- 그러나 '94년 6월 고속철도 차종이 프랑스 TGV로 확정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에서 프랑스의 TGV 소음기준인 “등가소음도” 기준(주거지역 65db, 상·공업지역 70db)으로의 변경을 요청
 - 환경부에서는 열차차종변경 만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가소음도”기준으로의 변경에 반대함에 따라 양부처의 입장이 대립되어 고속철도 방음벽 공사 추진에 차질 초래
- 한편 건설교통부에서는 '98년 12월부터 현재 프랑스의 TGV 소음기준인 “등가소음도”를 적용하여 시험선구간인 천안~대전 구간의 방음벽공사를 진행함에 따라 감사원 감사에 지적되는 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무총리실 수질개선 기획단에서 조정하게 되었음

□ 爭點事項

○ 건설교통부

- '94년 6월 고속철도 차종이 프랑스 TGV로 확정됨에 따라 프랑스의 TGV 소음기준인 “등가소음도”기준(주거지역 65db, 상·공업지역 70db)으로의 변경 필요

○ 환 경 부

- 열차차종변경 만으로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가소음도”기준으로의 변경에 반대

□ 調整經過

○ '99. 8. 23 : 부단장 주재 1차 조정회의 개최

○ '99. 9. 15 : 부단장 주재 2차 조정회의 개최

- 환경부, 건교부 담당국장 및 관계전문가 참석

⇒ 환경부와 건설교통부가 합동으로 소음 진동분야의 전문가로 “공동조사단”을 구성, 소음기준(안)을 마련

□ 調整結果

○ 공동조사단에서 건의한 소음기준을 토대로 환경부와 건교부에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 주거지역 : 63db(시험선 구간 65db)
- 상·공업지역 : 68db(시험선 구간 70db)

* 개통(2004년)후 15년 이내에 주거지역 60db, 상·공업지역 65db달성

野生動物 密獵・密去來 根絶對策 推進

□ 推進背景

- 야생동물이 보신・기호식품으로 잘못 인식되어 수요에 대한 공급부족으로 가격이 고가로 형성되어 밀렵이 성행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의 단속이 미흡하고 처벌도 미약
 - 전문 밀렵꾼은 전국에 약 1만 6천여명, 시장규모는 연간 1,500억원으로 추정(1인당 연간 평균 1천만원)
 - 전국 약 1만7천여개 건강원중 90%이상, 120여개 동물박제상 등이 밀거래의 한축을 형성
- 밀렵을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추진토록 하라는 총리님 지시(2000. 2. 10)에 따라 관계기관 회의 등을 거쳐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근절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음

□ 推進經過

- 2000. 2. 15 :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 총리님 보고 (수질개선기획단)
- 2000. 2. 24 :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차관회의 개최
 - 국방부・보건복지부・환경부・기획예산처 차관, 대검찰청 차장, 경찰청 청장, 수개단 부단장 참석
- 2000. 3. 4 : 차관회의 결과를 토대로 환경부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중 (환경부장관이 총리께 보고)

□ 主要 對策內容

- 민·관 상설단속반 설치·운용(환경부, 행자부, 법무부)
 - 민간밀렵감시단, 환경부, 시·도, 검찰 등으로 구성(팀당 3~5명)
 - 밀렵 극성기 월 4회, 기타 월 1회, 눈·비오는 취약시간대 집중단속
- 단속공무원의 기동성 확보를 위한 장비등 확충(기획예산처)
 - 차량, 개스총, 방탄조끼, 무전기, 야간장비 등
 - 밀렵지도 및 조수도감 제작, 단속반에 배부
- 군·경과 협조, 주요 교통로의 검문을 강화하여 밀렵자 색출처벌 및 유공자 포상(행자부, 국방부)
- 민간밀렵감시단에 대한 행·재정지원 (기획예산처, 행자부)
- 상습밀렵범은 징역형원칙 등 높은 형량으로 판결되도록 협의(법무부, 대법원)
- 밀렵신고체계 강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상향조정
(최고 100만원→200만원 :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개정)
- 전문·지역 밀렵꾼 파악·명단작성·감시 강화(환경부, 행자부)
- 불법엽구의 제작·판매자등에 대한 벌칙 강화(조수보호 및 수렵에관한법률 개정)
 - 제작·판매자 : 과태료 → 2년이하 징역, 500만원이하
- 밀렵된 야생동물을 사먹는 자를 처벌하고, 명단공개
- 수렵 및 유해조수 포획용 총기는 모두 경찰관서에 임시영치하는 방안 검토

寧越댐建設 妥當性 綜合檢討를 위한 共同調査團 構成・運營

□ 推進背景

- 90.9월 한강 상·하류지역에 대규모 홍수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한강수계 홍수조절용 댐건설을 90.10.16 대통령 방침으로 결정하고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
- 그간 타당성조사,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97년 9월 영월댐 건설예정지 지정 고시

□ 爭點事項

- 환경단체의 입장
 - 댐건설예정지역이 석회암지대로 되어 있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동지역이 천연기념물 및 희귀종 식물이 다수 자생하고 있고 또한 백년동굴 등 문화적 유산이 산재해 있는 등 천혜의 비경을 지니고 있어 댐건설로 동강의 아름다움이 사라져서는 안된다고 주장.
 - 댐건설을 굳이 하지 않아도 수요관리를 잘하면 영월댐 건설로 공급할 수 있는 양은 충분히 절약가능하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적극적인 반대활동 전개
- 건설교통부 등 사업시행주체
 - 수요관리를 하여도 절대량이 부족하고 물절약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수요관리와 병행하여 댐건설은 절대적으로 필요

- 댐의 안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국내외 지질전문기관의 정밀 조사결과 댐의 안전문제는 없다고 결론난 바 있으며
- 또한, 환경문제에 있어서도 생태계 파괴가 최소화 되도록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며 수질문제에 대해서도 댐상류에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여 해결할 것이라고 제시함

□ 調整經過(進行中)

- 영월댐 건설에 따른 찬·반 논쟁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위원장:박원훈)의 건의('99.6.1) 등에 따라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객관적 재조사를 추진
- 환경단체와 정부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영월댐 건설타당성 종합검토를 위한 공동조사단」을 발족('99.8.26)
- 조사단은 외부간섭없이 5개분과별로 자율적인 조사를 그간 수행하여 왔으며 8개월간의 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5.19 그 조사결과를 국무총리실에 제출

□ 向後 推進計劃

- 제출된 조사결과에 대해 국무조정실에 설치되어 있는 「물관리정책민간위원회」(위원장 : 박원훈) 보고 및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의 심의를 거쳐 정부대책 확정